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실태 연구

강마야(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maya@cni.re.kr)

이도경(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lg6678@cni.re.kr)

*자문 도움 : 김기흥 부소장(한국유기농업연구소), 정민철 대표(젊은협업농장), 충남 도내 청년농민 자문단 등

이번 연구는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분야별 기초실태를 수집,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민선 8기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설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1. 서론
 2. 기초현황 분석
 3. 정책공급 분석
 4. 정책수요 분석
 5. 분야별 실태분석
 6. 결론
- 참고문헌

요약

- 공통적인 현황 및 문제점
 - 청년농업인 초기 정착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서 농지확보, 영농자금확보, 정주여건, 주택복지문화의료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고, 청년농업인 유형에 따른 차등적 정책접근 필요
- 분야별 실태 : 농지 분야
 - 지역에서 농지확보 어려움, 농지정보 부족(열악한 정보 접근성), 농어촌공사 및 농지은행 사업방식 아쉬움, 농지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 농지구입 및 시설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요약
- 분야별 실태 :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 농촌지역에 많은 빈집, 귀농인들에게 적합한 숙소 부족, 생활할 공간 부족, 유입을 위해서 적절할 주거지 확보 필요,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취약, 청년농업인의 주택수요와 농촌지역에서의 주택공급 간 불일치 등으로 요약
- 분야별 실태 : 교육 분야
 - 농사기술 습득 및 멘토-멘티 과정이 불충분 등으로 요약
- 분야별 실태 :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스마트팜) 분야
 - 각종 보조사업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은 농협 대출조건, 농사짓기 위해 초기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 투자 불가피, 빚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정책금융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
 - 스마트팜은 수혜대상의 소수에 집중, 데이터 체계 부족, 스마트팜 재배품목의 단순화, 일부 품목에 집중된 스마트팜으로 인해 기존 농업과의 차별성 부족, 경쟁구도 심화,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요약
- 분야별 실태 :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 농촌지역 내 일자리 부족, 다양한 일자리 부족,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사 외에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문제, 전업이 불가하여 겸업이 불가피, 농사만으로 생활비 감당 부족 등으로 요약
- 분야별 실태 :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 관심과 결심 단계별 프로그램 차등,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와의 연결, 다양한 워크숍 및 모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대활동과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등으로 요약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실태를 좀 더 체계화, 구조화하여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미래 성장동력창출 한계) 신성장동력 창출할 만한 농어업 산업기반 부족, 청년농어민과 은퇴농·고령농어민이 혼재된 불분명한 정책시행을 하고 있다. 즉, 산업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지원대상이 혼재됨으로써 재정투입성과 창출 미흡, 농어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행 국가제도의 근본적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율 증가) 2010년~2019년 전국 농가인구는 연평균 3.4% 감소하는데 반해 충남 농가인구는 연평균 4.4% 감소, 전국 농가의 평균 연령은 65.6세인데 반해 충남 농가의 평균 연령은 66.3세으로 인구 감소화 및 고령화율 증가가 심각해지고 있다.
- (농지기반 축소) 2010년~2020년 전국 경지면적의 평균 감소율은 8.8%인데 반해 충남 경지면적의 평균 감소율은 10.7%로서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기반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청년농업인 유입 정체) 2015년~2019년 전국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연평균 8.8% 감소, 충남의 청년농업인은 연평균 8.3%로서 감소 추이가 두드러지고 인력부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 즉, 핵심은 충청남도 내에서 농림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의 중심에 청년농업인 유입과 육성이 있다. 민선 8기 충남 농정의 핵심지향점은 그곳을 향해야 한다.

● 연구의 목적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물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 청년농업인 기초현황 분석

- 청년농업인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사업(예산), 집행조직 현황분석
- 청년농업인 인식 실태 파악
-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

● 연구의 체계(〈그림 1-1〉 참고)

- 연구 내용에 따라 채택한 연구 방법은 각종 자료수집, 기초통계 분석, 세출예산 분석, 사업지침 분석, 선행연구·정책간담회·언론기사 등을 통한 내용분석이다.
- 이를 통하여 청년농업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농업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도록 한다.

〈그림 1-1〉 연구의 체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기초현황	➡	각종 자료수집 기초통계 분석	➡	① 농지 분야
정책, 사업, 집행조직 현황	➡	세출예산 분석 사업지침 분석	➡	②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분야별 인식실태	➡	선행연구·정책간담회·언론 기사·자문회의 등 내용분석	➡	③ 교육 분야
				④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⑤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⑥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⑦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⑧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⑨ 그 외 정책방향, 주체별 역할 에 대한 생각

주 : 저자 작성함.

●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정책활용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기초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한 계획이 가능하다.

02 기초현황 분석

1. 인구 및 사회학적 현황

● 충남의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표 2-1〉 참고)

- 2020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2,142호로 전국 농가 1,035,193호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농가인구는 266,509명으로 전국 농가인구 2,314,064명의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9%를 차지하던 것과 대비하면 비중이 줄어들음을 알 수 있다.
-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1.3%로 감소하고 있고, 충남의 농가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2.1%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2.8%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충남에서는 3.8%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충남의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2010년&2020년)

(단위 : 가구, 명, %)

시군	2010		2020		농가 연평균 증가율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농가	농가인구	농가	농가인구		
전국(A)	1,177,318	3,062,956	1,035,193	2,314,064	-1.3%	-2.8%
충남(B)	151,424	394,324	122,142	266,509	-2.1%	-3.8%
비중(B/A,%)	12.9%	12.9%	11.8%	11.5%		
천안시	12,406	36,774	11,111	27,245	-1.1%	-3.0%
공주시	12,089	31,577	9,281	20,258	-2.6%	-4.3%
보령시	9,006	22,632	7,792	16,641	-1.4%	-3.0%
아산시	10,499	30,019	8,847	19,952	-1.7%	-4.0%
서산시	13,320	33,778	11,082	24,141	-1.8%	-3.3%
논산시	11,925	31,185	9,882	21,247	-1.9%	-3.8%
계룡시	549	1,647	513	1,237	-0.7%	-2.8%
당진시	-	-	10,177	22,898	-	-
금산군	7,638	19,188	6,001	13,183	-2.4%	-3.7%

시군	2010		2020		농가 연평균 증가율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농가	농가인구	농가	농가인구		
연기군	5,520	15,228	—	—	—	—
부여군	10,905	27,798	9,279	19,918	-1.6%	-3.3%
서천군	7,136	17,255	5,940	12,146	-1.8%	-3.5%
청양군	6,427	15,694	6,355	12,933	-0.1%	-1.9%
홍성군	11,082	28,274	10,029	21,265	-1.0%	-2.8%
예산군	11,118	28,280	9,273	20,065	-1.8%	-3.4%
태안군	8,315	19,266	6,580	13,380	-2.3%	-3.6%
당진군	13,489	35,729	—	—	—	—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조사 :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및 농가인구.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자 : 2022.08.01.)

● 충남의 연령별 농업경영주 현황(〈표 2-2〉 참고)

- 2020년 충남의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65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6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세 미만의 청년농가는 충남 전체 농가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7.3세로 전국의 평균 연령 66.1세보다 1.2세나 높게 나타나 충남 전체의 농업 부문에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충남의 연령별 농업경영주 현황(2020년)

(단위 : 가구, 세)

시군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 이상	합계	평균 연령
전국(A)	1,089	11,328	61,974	202,331	179,143	168,571	158,197	133,960	118,591	1,035,193	66.1
충남(B)	116	1,141	5,997	20,992	20,109	19,816	19,659	16,742	17,568	122,142	67.3
비중(B/A,%)	10.7%	10.1%	9.7%	10.4%	11.2%	11.8%	12.4%	12.5%	14.8%	11.8%	
천안	16	228	1,292	5,140	4,194	3,652	3,182	2,362	2,156	22,222	65.0
공주	14	79	449	1,698	1,632	1,581	1,435	1,176	1,217	9,281	66.8
보령	8	63	322	1,190	1,239	1,311	1,354	1,151	1,154	7,792	68.1
아산	9	88	433	1,624	1,483	1,402	1,379	1,176	1,253	8,847	67.0
서산	11	87	549	1,949	1,653	1,701	1,814	1,601	1,717	11,082	67.7
논산	12	136	549	1,701	1,723	1,672	1,522	1,266	1,301	9,882	66.7
계룡	1	10	40	113	100	90	71	49	37	513	63.7
당진	8	68	449	1,639	1,582	1,646	1,758	1,496	1,531	10,177	68.0
금산	5	56	319	1,090	1,021	988	932	831	759	6,001	66.8
부여	11	97	486	1,536	1,659	1,552	1,457	1,247	1,234	9,279	67.0

시군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세 이상	합계	평균 연령
서천	8	52	219	752	914	972	1,073	914	1,036	5,940	69.0
청양	5	63	317	1,067	978	994	926	857	1,148	6,355	68.0
홍성	11	124	578	1,656	1,480	1,552	1,579	1,380	1,669	10,029	67.6
예산	3	67	422	1,504	1,525	1,473	1,511	1,313	1,455	9,273	67.9
태안	2	37	219	903	1,023	1,056	1,257	1,104	979	6,580	68.8

자료 : 통계청(2020), 농림어업조사 :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자 : 2022.08.01.)

●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표 2-3〉 참고)

- 충남 전체 농가인구 중 20세 이상~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2016년 9.39%(296,801명 중 27,884명)에서 2020년 8.36%(266,509명 중 22,285명)로 감소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2016년 43.71%(296,801명 중 129,759명)에서 2020년 47.27%(266,509명 중 125,989명)로 증가하였다.
- 충남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의 청년 농가는 2016년 0.88%(128,275가구 중 1,139가구)에서 2020년 1.03%(122,142가구 중 1,259가구)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2016년 57.98%(128,275가구 중 74,382가구)에서 2020년 60.4%(122,142가구 중 73,785가구)로 증가하였다.

〈표 2-3〉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 현황(2016년~2020년)

(단위 : 명, 가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충남 전체 농가인구수	296,801 (100%)	288,800 (100%)	276,426 (100%)	263,124 (100%)	266,509 (100%)	
20세~39세	27,884 (9.39%)	25,522 (8.83%)	22,659 (8.19%)	20,104 (7.64%)	22,285 (8.36%)	
65세 이상	129,759 (43.71%)	133,966 (46.38%)	135,284 (48.94%)	134,990 (51.30%)	125,989 (47.27%)	
충남 전체 농가수	128,275 (100%)	125,886 (100%)	123,480 (100%)	119,903 (100%)	122,142 (100%)	
40세 미만	1,139 (0.88%)	745 (0.59%)	557 (0.45%)	545 (0.45%)	1,259 (1.03%)	
65세 이상	74,382 (57.98%)	77,137 (61.27%)	78,322 (63.42%)	78,565 (65.52%)	73,785 (60.4%)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조사 : 경영주 연령별 농가.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자 : 2022.08.01.)

● 충남의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표 2-4> 참고)

- 2019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충남 청년 농업인 수는 6,965명으로 25세 미만 382명, 25~29세 900명, 30~34세 1,823명, 35~39세 3,860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군별로는 논산시(738명), 부여군(676명), 천안시(6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9,846명이던 것이 2016년 9,144명, 2017년 7,595명, 2018년 7,284명을 거쳐 2019년에는 7천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 5년간 2,881명이 줄어들어 약 29.2%가 감소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만 2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은 두 해째 증가하고 있다(김기홍, 2020).
- 충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2015년 3.4%(301,324명 중 10,375명)에서 2020년 2.5%(284,600명 중 7,105명)로 감소하였다.
- 반면, 충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2015년 47.1%(301,324명 중 141,940명)에서 2020년 55.9%(284,600명 중 159,344명)로 증가하였다.

<표 2-4> 충남의 연령별 농업경영체(≡농업인) 등록 현황(2015년&2020년)

(단위 : 명)

시군	2015년도				2020년도			
	합계	39세 미만	64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39세 미만	65세 미만	65세 이상
충남	301,324	10,375	148,926	141,940	284,600	7,105	118,151	159,344
천안시	27,524	806	15,749	10,958	25,065	633	12,135	12,297
공주시	24,216	993	12,587	10,621	21,558	493	9,359	11,706
보령시	19,917	738	9,483	9,695	19,569	492	7,820	11,257
아산시	19,311	469	9,783	9,054	19,029	449	8,165	10,415
서산시	27,497	840	13,114	13,521	25,741	495	10,298	14,948
논산시	24,176	967	12,472	10,737	23,391	760	10,362	12,269
계룡시	1,513	54	898	561	1,527	43	797	687
당진시	28,215	910	13,293	14,002	24,581	473	9,409	14,699
금산군	16,325	676	8,278	7,368	15,857	467	7,136	8,254
부여군	22,967	888	11,427	10,651	22,379	702	9,275	12,402
서천군	15,208	486	6,810	7,912	14,165	333	5,058	8,774
청양군	12,917	487	6,008	6,422	12,922	340	5,269	7,313
홍성군	22,189	778	10,717	10,687	21,005	611	8,473	11,921
예산군	21,861	754	10,537	10,570	21,052	511	8,423	12,118
태안군	17,488	529	7,770	9,181	16,759	303	6,172	10,284

출처 : 농림축산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http://uni.agrix.go.kr>, 검색일자 : 2022.08.01.)

●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현황(<표 2-5> 참고)¹⁾

- 전국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귀촌 인구는 489,692명으로 2014년 457,511명 대비 7.0% 증가하였다. 하지만 귀농인구는 2020년 12,570명으로 2014년 17,976명 대비 -30.1%나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는 귀농보다는 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귀촌 인구는 48,343명으로 2014년 47,622명 대비 1.5% 증가하였다. 2020년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 인구는 1,502명으로 2014년 1,123명 대비 33.7% 증가하였고, 2020년 귀촌인구는 46,841명으로 2014년 46,499명 대비 0.7% 증가하였다. 충남은 귀촌보다는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수도권 귀농·귀촌 인구 유입 4년 연속 1위 지역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충남의 5개년 간 40세 미만 귀농 인구를 청년농업인 대리지표로 본다면, 2020년 충남 전체 귀농인구 1,492명 중 40세 미만 귀농인구는 162명(10.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현황

(단위 : 명, %)

전체 귀농·귀촌 인구 추이							
구 분		2014년(A)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B-A)
전국	귀농·귀촌 인구	457,511	486,638	484,529	455,968	489,692	7.0%
	귀농 인구	17,976	19,860	12,055	11,504	12,570	-30.1%
	귀촌 인구	439,535	466,778	472,474	444,464	477,122	8.6%
충남	귀농·귀촌 인구	47,622	49,668	48,374	46,141	48,343	1.5%
	귀농 인구	1,123	1,226	1,405	1,328	1,502	33.7%
	귀촌 인구	46,499	48,442	46,969	44,813	46,841	0.7%



40세 미만 귀농 인구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충남	전체 귀농 인구	1,423 (100%)	1,384 (100%)	1,317 (100%)	1,260 (100%)	1,492 (100%)	
	40세 미만 귀농 인구	130 (9.13%)	130 (9.39%)	155 (11.76%)	128 (10.15%)	162명 (10.85%)	

자료 : 1. 통계청(각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 시도별·성별·연령별 귀농가구주.

2. 통계청(각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 시도별·성별·연령별 귀농가구주.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자 : 2022.08.01.)

1) 주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하면서 귀농과 귀촌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이외에 농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를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2. 농지 및 주거 현황

- 농지 분야 : 충남의 지역별·연령대별 개인소유 농지 현황(〈표 2-6〉, 〈표 2-7〉, 〈그림 2-1〉 참고)
 - 충남의 지역별·연령대별 개인소유 농지 현황(결측치를 포함한 경우)을 살펴보면, 50대 미만의 개인소유 농지면적은 전체 농지의 7.7%를 차지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개인소유 농지는 50.8%에 달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 50대 미만 개인소유 농지의 경우, 계룡시는 전체 농지의 5.0%, 보령시는 9.2%이다.
 - 60대 이상 개인소유 농지의 경우, 청양군은 전체 농지의 59.5%, 홍성군은 69.3%이다.

〈표 2-6〉 충남의 지역별·연령대별 개인소유 농지 현황(50대 미만, 2022년)

(단위 : 건, m², %)

구분	전체 농지 수 (건)	50대 미만 개인소유 농지 수(건)	비중(%)	전체 농지면적(m ²)	50대 미만 개인소유 농지 면적(m ²)	비중(%)
천안시	121,520	7,881	6.5	159,864,120.0	11,211,915	7.0
공주시	134,883	8,886	6.6	155,609,825.7	11,358,100	7.3
보령시	110,843	9,071	8.2	144,314,386.1	13,286,472	9.2
아산시	129,737	8,021	6.2	183,461,859.9	12,415,749	6.8
서산시	153,045	11,284	7.4	269,992,359.4	20,445,750	7.6
논산시	137,456	9,183	6.7	201,451,539.9	15,363,510	7.6
계룡시	5,624	268	4.8	6,154,692.9	308,647	5.0
당진시	158,886	11,578	7.3	281,359,030.1	20,010,720	7.1
금산군	94,509	6,836	7.2	106,113,660.1	8,373,616	7.9
부여군	127,937	8,372	6.5	190,180,819.7	14,907,358	7.8
서천군	97,349	7,268	7.5	138,452,947.2	11,323,775	8.2
청양군	83,056	5,891	7.1	104,719,682.3	8,692,612	8.3
홍성군	114,955	8,811	7.7	159,143,197.2	13,597,840	8.5
예산군	127,984	9,699	7.6	187,985,755.7	15,587,324	8.3
태안군	105,730	8,008	7.6	173,560,142.7	12,277,303	7.1
충남 전체	1,703,514	121,057	7.1	2,462,364,018.7	189,160,691	7.7

자료 : 국토교통부(2022), 국가중점개발데이터 :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검색일자 : 2022.07.06.)

주 :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농지 수 비중은 10.5%, 농지면적 비중은 10.5%임.

〈표 2-7〉 충남의 지역별.연령대별 개인소유 농지 현황(60대 이상, 2022년)

(단위 : 건,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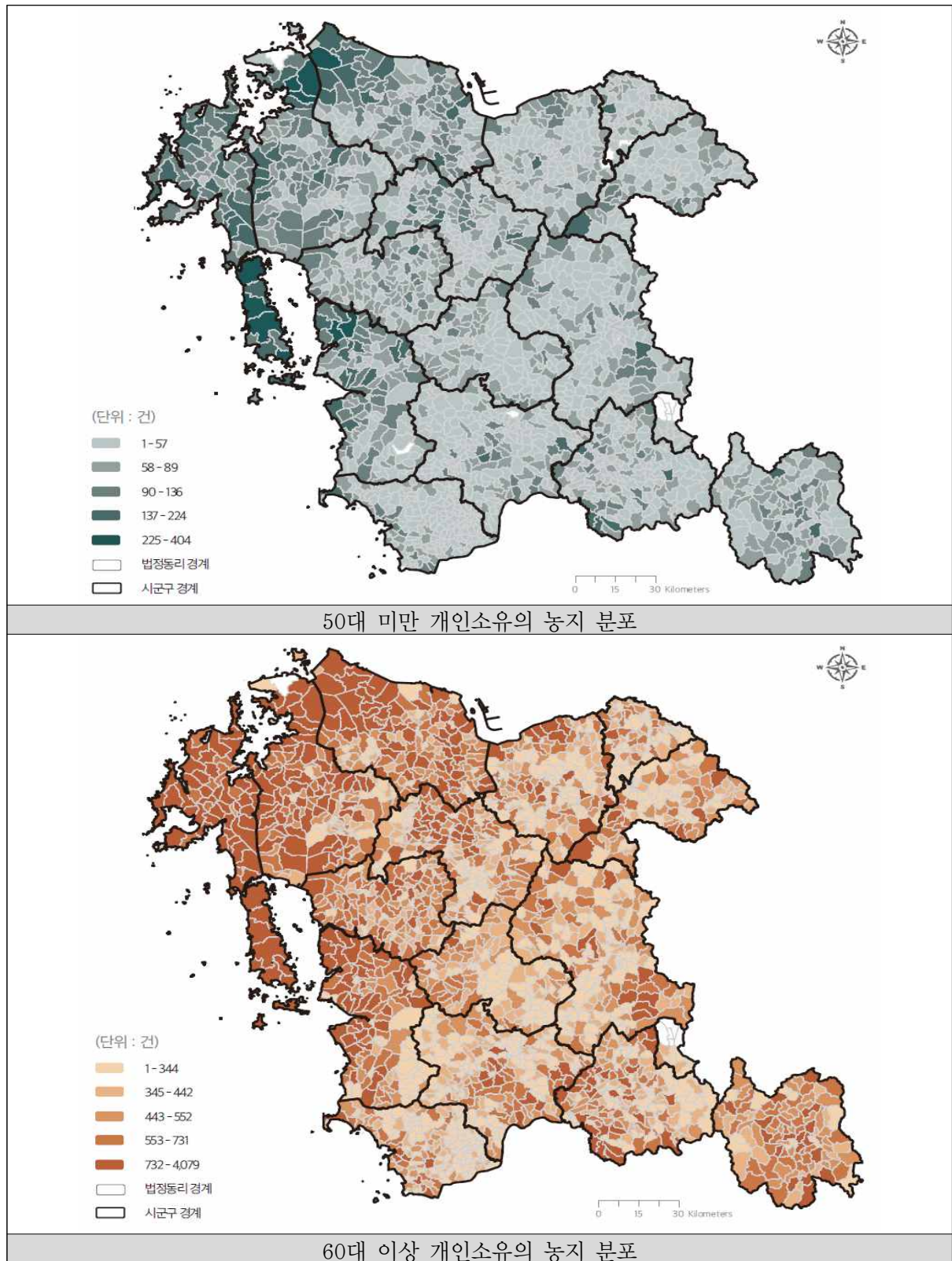
구분	전체 농지 수 (건)	60대 이상 개인소유 농지 수(건)	비중(%)	전체 농지면적(m ²)	60대 이상 개인소유 농지 면적(m ²)	비중(%)
천안시	121,520	50,343	41.4	159,864,120.0	78,188,739	48.9
공주시	134,883	55,688	41.3	155,609,825.7	73,146,334	47.0
보령시	110,843	54,395	49.1	144,314,386.1	75,019,566	52.0
아산시	129,737	53,235	41.0	183,461,859.9	88,709,837	48.4
서산시	153,045	76,211	49.8	269,992,359.4	131,194,269	48.6
논산시	137,456	65,211	47.4	201,451,539.9	109,104,063	54.2
계룡시	5,624	1,857	33.0	6,154,692.9	2,128,437	34.6
당진시	158,886	80,367	50.6	281,359,030.1	144,054,015	51.2
금산군	94,509	43,407	45.9	106,113,660.1	53,989,174	50.9
부여군	127,937	60,896	47.6	190,180,819.7	101,114,295	53.2
서천군	97,349	48,301	49.6	138,452,947.2	74,323,430	53.7
청양군	83,056	32,542	39.2	104,719,682.3	45,889,911	43.8
홍성군	114,955	58,516	50.9	159,143,197.2	85,363,503	53.6
예산군	127,984	64,172	50.1	187,985,755.7	103,027,414	54.8
태안군	105,730	53,466	50.6	173,560,142.7	84,626,758	48.8
충남 전체	1,703,514	798,607	46.9	2,462,364,018.7	1,249,879,745	50.8

자료 : 국토교통부(2022),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enu=2679>, 검색일자 : 2022.07.06.)

주 :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농지 수 비중은 69.2%, 농지면적 비중은 69.7%임.

〈그림 2-1〉 충남의 연령대별 개인소유 농지 공간분포(2022년)



자료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 시리즈1 :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 통권 35호, 충남연구원.

● 주거 분야 : 충남의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표 2-8〉 참고)

- 김기홍(2020)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주거를 제공하자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는 2019년도에 제안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유일하다. 국비 사업과 별도로 청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주거 부분에서는 귀농인의 집이 있으며 지역의 여건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성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 특히 귀농인의 집의 경우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충남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56채가 운영되고 있다. 재원별로는 귀농인의 집(국비) 28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국비) 11채, 시군비 17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충남에서는 청양군 10개소, 홍성군 9개소 순으로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층을 포함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지원 자금이 8천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8〉 충남의 귀농인의 집 운영 현황(2019년)

(단위 : 채, 가구, 개월)

시군	합계	재원별 수량(채)			2019년 입주실적		비고
		귀농인의 집(국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국비)	시군비	가구수	입주 개월 수	
충남	56	28	11	17	123	470	
천안	0	0	0	0	0	0	
공주	3	2	0	1	5	23	
보령	2	2	0	0	3	34	2개소 3동
아산	0	0	0	0	0	0	
서산	2	0	2	0	4	28	2개소 4동
논산	0	0	0	0	0	0	
계룡	0	0	0	0	0	0	
당진	1	1	0	0	1	6	
금산	1	1	0	0	4	12	체류형 창업보육센터 제외
부여	7	0	0	7	11	18	희망센터 제외
서천	7	5	1	1	44	59	
청양	10	2	1	7	14	94	
홍성	9	5	3	1	14	85	
예산	8	8	0	0	17	71	
태안	6	2	4	0	6	40	

자료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9),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내부자료(2019.1~12.).

3. 정책동향

● (전체비전) 윤석열 정부의 청년관련 정책 공약사항(〈표 2-9〉 참고)

- 윤석열 정부는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한 공약사항 방향의 일환이다.

〈표 2-9〉 윤석열 정부의 청년관련 정책 공약사항

구분	과제	주요 내용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주거)	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넓히는 ‘주거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청약 및 특별 공급 제도개선 ·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는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 ·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일자리)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 일정협 기회 제공 ·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 양성해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교육)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단속·점검과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준비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강화 ·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출시 ·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확대
참여의 장 대폭 확대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불공	

구분	과제	주요 내용
	정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 활성화 · 현재 190개인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늘리고 청년 위촉 확장 ·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정보와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인 ‘(가칭)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 ·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방침

자료 : 대한민국(2022), 정책뉴스 : 청년에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17)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 내 집 마련 기회 넓히는 ‘주거사다리’ 복원...기여금 매칭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2022.06.16.).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556>, 검색일자 : 2022.08.12.)

● (종합계획) 농식품부의 제1차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3-`27, 2022년 9월 발표)²⁾

〈계획 개요〉

- 고령,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 곤란
-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대폭 확대·육성하고 디지털 기술, 푸드테크 등을 농업에 결합,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

- 여러 청년농업인 사업을 통합, 교육·농지·자금·주거 등 맞춤형 지원, 현재 1만2000명 정도인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3만 명 육성으로 확대(‘27)
- 분산된 청년농 사업 통합·패키지 지원, 지원대상(‘22. 2천명) 두 배 이상 확대 등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 마련(9월)

〈핵심사업 : (스마트농업)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최대 30년)

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료,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회.

● (소득안전망)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사업³⁾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신청 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지급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사기술)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정책(〈표 2-10〉 참고)

- 농식품부에서는 스마트농업 청년층 유입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도 그의 일환이다. 결과적으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을 유입하고 농촌에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청년층 유입정책을 위해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종합자금 등의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하여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을 의미한다(변재연, 2022). 이를 위해서 ①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③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재정사업을 추진한다.

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young/1384/subview.do>, 검색일자 : 2022.08.01.)

〈표 2-10〉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팜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스마트농업 청년층 유입정책	추진배경	·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실습중심의 전문화, 체계화된 장기교육을 제공하여 2022년까지 전문인력 600명 양성 · 창업자금과 농지지원, 실패에 대한 안전망 강화
	재정사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2019년~) · 임대형 스마트팜(2019년~) · 스마트팜 종합자금(2017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배경	· 스마트팜에 청년창업, 기술혁신 R&D, 판로개척 기능 집약하여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 창출하는 거점,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사업구성	· (청년 보육)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으로 전문지식 습득 후 임대형 실습농장에서 경영실습, 임대형 실습농장 스마트팜을 거쳐서 창업으로 연착륙 · (연구, 실증)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 연구기관의 실증 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검인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 (정주) 혁신밸리 입주기관, 업체, 청년 등의 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마련
	재정사업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 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 스마트팜 실증단지(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사례	※ 청년농 육성·정착 사례 : 스마트팜 혁신밸리(전국 4개소, 연간 약 200명) ▶ 스마트팜 교육(20개월), 임대형 스마트팜(약 500평/1인, 3년), 임대주택 제공


자료 : 1. 변재연(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사업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12.23.),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로 농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3. 관계부처 합동(2021.12.23.),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안),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2.15.), 스마트농업 인력 기술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1.29.), 스마트농업 인력, 기술의 확산 거점인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첫 운영 개시.

● (주거 등 정주기반)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정주기반 관련 정책(〈표 2-11〉 참고)

- 청년 농업인에게 주거를 제공하자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는 2019년도에 제안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이 유일하다.
-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농촌정착을 위해 보육·문화 인프라 복합 주거공간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선정되는 수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여전히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주거지 확보가 쉽지는 않다(김기홍, 2020)⁴⁾

4) 자료 : 김기홍(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방안 연구, 전략연구 2020-16, 충남연구원.

〈표 2-11〉 농식품부의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및 귀농귀촌 정주기반 관련 사업

사업명	목적 및 내용	상세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 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의 출산률을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전국 4개소 선정(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상주시) - 지구당 2년간 80억 25백만 원 지원 예정(국비 50%, 지방비 50%)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이거나,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의 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 -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는 단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의무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자금은 최대 8,000만 원까지 저금리(2%)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귀농인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기 전 탐색 단계의 일시적인 거주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정도 거주 가능 -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조성이 이루어지기도 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검색일자 : 2022.08.01.)

● (농촌 일자리)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표 2-12〉 참고)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만 39세 이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른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이다. 크게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소멸 위기지역 창업, 창업성장플러스), 지역포용형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표 2-12〉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지역혁신형	<p>① 사업개요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 지원하는 사업</p> <p>② 지원분야 :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p> <p>③ 지원기간 : 2년 동안 지원, 최소 2년 동안 지원 받으신 후 3년차에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 실 경우 1년간 추가 지원</p> <p>④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동안 연 2,400만 원 내외에서 임금 지원, 직무역량 교육 지원 - 3년차에 정규직 유지 또는 정규직 취창업을 통한 지역정착할 경우,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소멸 위 기지역 창업)	<p>① 사업개요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 및 성장 지원</p> <p>② 지원분야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희망하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창업 청년의 성장·정착 기회 부여</p> <p>③ 지원기간 : 2년 동안 신규 창업 및 성장 지원 비용 지원,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 우 1년간 인건비 추가 지원</p> <p>④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500만 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500만 원 추가 지원 -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 동안 인건비 2,400만 원 추가 지원

상생기반대 응형(창업성 장플러스)	① 사업개요 : 서울 외 지역에서의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 지원 ② 지원분야 : 서울 외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 지원 ③ 지원기간 : 1년 동안 지원, 2년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 더 지원 ④ 지원내용 - 1년차에 1인당 연 1,500만 원 지원 - 2년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 인건비 2,400만원 1년 더 지원
지역포용형	① 사업개요 : 직무경력 쌓기, 직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지원 ② 지원분야 :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 ③ 지원기간 :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 ④ 지원내용 : 1년 동안 연 2,250만 원 내외에서 임금 지원, 직무교육 지원

자료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검색일자 : 2022.08.01.)

1. 청년정책(대상자 기준, 영역) 현황

● 정책대상 기준인 연령(〈표 3-1〉 참고)

- 법률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청년’ 정의 중 연령 기준은 무려 18개 연령구간 범위를 보이는 만큼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지역별로, 일반 청년인과 청년농어업인별로 각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연령구간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청년인의 연령구간은 18세 이상~39세 이하, 15세 이상~29세 이하, 15세 이상~34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농어업인(청년농수산인, 후계농어업인 등 포함)의 연령구간은 18세 이상~4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즉, 후계농어업인은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자로 정의,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농어업 분야의 특성(농촌인구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가속화)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연령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세부적으로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은 다른 직장생활을 경험한 뒤 농촌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는 입장, 반대로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기존 농업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면서 신규로 유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5) 주 : 농식품부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어업인과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어업인을 각각 선발해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는데 후계농어업인에게는 최대 3억 원의 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청년창업농어업인에게는 이것에 더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2020년 제정)에 의거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나이를 각각 규정한 것이다(저자 주).

〈표 3-1〉 충남의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연령 기준

연령 구간	15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하한선없음	
	15세 이상~ 29세 이하	15세 이상~ 29세 미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15세 이상~ 39세 이하	18세 이상~ 34세 이하	18세 이상~ 39세 이하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미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만18세 이상~ 45세 이하	18세 이상~ 49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만19 세 이상~ 45세 이하	40세 미만	50세 미만	
총합계	7	1	6	1	1	14	6	2	1	2	3	1	1	1	4	1	2	2	
일반청 년인	7	1	6	1	1	13	5	1	0	0	3	1	0	1	4	1	0	0	
청년농 어업인	0	0	0	0	0	1	1	1	1	2	0	0	1	0	0	0	2	2	
청년기 본법														●					
중소기 업인력 지원특 별법, 조세특 례제한 법			●																
청년고 용촉진 특별법	●																		
전통시 장법																	●		
국민의 힘																		만 45세 미만	
더불어 민주당																		만 45세 이하	
정의당																		만 35세 이하	

자료 : 1.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조례(참고문헌 표기로 대체).

2. 청년기본법.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6. 아주경제(2022.08.16.), “29-35-45?…법 따라 다른 ‘고무줄’ 청년 나이”(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6145335248>, 검색일자 : 2022.08.16.).

주 : 총 48개 조례 및 법률을 검색한 결과로서 세부 조례 및 법률명은 참고문헌에 명시함.

● 정책대상 기준인 연령 외 지역거주 등(〈표 3-2〉 참고)

- 법률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청년’ 정의 중 연령 외 기준은 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주민등록), 해당지역 이주, 해당지역 생활, 해당지역 희망, 해당업종 경영(경력기

간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 일반 청년인과 청년농어업인별로 각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통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연령 외 기준은 ‘해당지역 거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청년인의 연령 외 기준은 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주민등록), 해당업종 경영(경력기간 포함), 해당지역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농어업인(청년농수산물, 후계농어업인 등 포함)의 연령 외 기준은 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주민등록), 해당업종 경영(경력기간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서는 연령 기준 외에 다른 조건들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단,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현재 농업경영체 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점이 있고, 청년농어업인들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과도한 기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립과 정착단계를 거친 청년에 한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 충남의 ‘청년’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연령 외 기준

구분	해당지역 거주	해당지역 주소 (주민등록)	해당지역 이주	해당지역 생활	해당지역 희망	해당업종 경영 (경력기간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총합계	27	18	1	11	9	12	5
일반청년인	20	12	0	11	9	7	0
청년농어업인	7	6	1	0	0	5	5
비고							(논산시, 부여군,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자료 : 1.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조례(참고문헌 표기로 대체).

2. 청년기본법.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주 : 총 48개 조례 및 법률을 검색한 결과로서 세부 조례 및 법률명은 참고문헌에 명시함.

●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분야(〈표 3-3〉 참고)

〈상위계획과의 연계〉

- 지역단위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등 인력육성계획 연계가 필요하다.

〈시기별·단계별 종합 지원〉

- 배균기 외(2021)⁶⁾는 준비 및 진입과정, 영농정착 과정으로, 이항미 외(2022)⁷⁾는 진입 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0)⁸⁾에서는 준비, 초기, 정착, 안정단계로 구분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심·결심 단계, 준비 단계, 유입 및 성장단계, 정착 및 자립단계 등으로 구분하였다.
- 전반적으로 “준비기-창농초기-재구조화기-정착기” 종합패키지 지원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고 창농 초기 유입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유형별·단계별 차등 지원〉

- 정책대상자를 기반이 없는 청년창업농과 기반이 있는 청년후계농을 다르게 접근한다.
- 맞춤형, 차등형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혹은 원스톱 창농 지원조직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표 3-3〉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단계별 지원사업 현황

단계	주요 내용
예비기	잠재된 농업 인재 발굴을 위해 한국4-H본부와 연계해 청소년·대학생 4-H회원 대상으로 농심(農心) 함양과 농업 분야 취·창업 교육, 농업 미래 비전 토론회 진행
준비기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농업기계 입문 등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해 안정적 정착의 토대 마련
정착기	교육 대상자별 영농 정착 수준에 부합하는 품목별 기술교육, 경영진단 분석, 농식품 창업교육을 운영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통해 기술자립 지원
성장기	강소농교육, 농업인대학, 마이스터대학 같은 기존 교육과 연계 강화, 농산물 가공·판매(마케팅)·수출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과정 운영 계획 창업지원 뒷받침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기타정보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정 정책과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 개설(정부·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자료 : 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2.03.24.), 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 : 농업 인재 양성·청년층 농업 진출 확대 위한 마중물.

2. 농축유통신문(2022.03.24.), “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14>, 검색일자 : 2022.08.10.).

6) 자료 : 배균기.조원지.이병훈(20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1-21, 전북연구원.

7) 자료 : 이항미.이미선(2022), 지역별로 차별화된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8)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0), 2030세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정책목적 및 정책영역 분야(〈표 3-4〉 참고)

- 법률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중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고용촉진 순으로 나타났다.
- 법률 및 조례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중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농업 순으로 나타남. 즉, 청년정책 실행은 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실행을 전제하고 있다.

〈표 3-4〉 충남의 ‘청년정책’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 정책목적과 정책영역

구분	정책목적						정책영역							
	권리보 호 및 신장	정책결 정과정 참여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창업 활성 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농업	복지	환경
국가	●	●	●	●	●		●	●	●		●			
계룡시	●	●	●					●	●	●	●	●	●	
공주시			●	●	●	●								
금산군	●	●	●	●				●	●	●	●	●	●	
논산시	●		●	●	●	●		●	●	●	●		●	
당진시	●	●	●					●	●	●	●	●	●	
보령시	●	●												
부여군							●	●	●	●	●	●	●	●
서천군	●	●	●					●	●	●	●	●	●	
아산시	●	●												
예산군	●	●	●					●	●	●	●	●	●	
천안시	●	●	●	●	●	●		●	●	●	●			
청양군	●	●	●					●	●	●	●	●	●	
태안군	●	●	●					●	●	●	●	●	●	
홍성군	●	●	●					●	●	●	●	●	●	
총합계	13	12	12	5	4	3	2	12	12	11	12	9	10	1

자료 : 1.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조례(참고문헌 표기로 대체)

2. 청년기본법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주 : 총 48개 조례 및 법률을 검색한 결과로서 세부 조례 및 법률명은 참고문헌에 명시함.

2. 농정관련 부서의 정책·사업·예산·조직 현황

● 청년농업인 관련 부서별 정책 혹은 사업(예산) 현황(〈표 3-5〉 참고)

- 청년농업인 관련 충청남도청 2개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개국에서 31개 사업 집행
- 2022년 본예산 기준, 농림축산분야는 1.45조 원인데 이 중 청년농업인 분야(청년창업농, 후계농, 4-H 등)는 66.8억 원 투자, 약 4.6%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표 3-5〉 충남의 청년농업인 부서별 사업예산 현황(2022년 본예산)

(단위 : 천 원, %)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천 원)	비중(%)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소계(7개 사업)	4,109,350	61.5%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30,000	
	○여성·청년농업인 정책 홍보	8,500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192,000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및 운영관리	24,000	
	○청년후계농업인 시군심사및모니터링단 운영	86,000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709,00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59,850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소계(2개 사업)	270,180	4.0%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39,780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	230,4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소계(3개 사업)	66,000	1.0%
	○청년 창업농 컨설팅 추진 및 전산용품 구입	21,500	
	○청년 창업농 컨설팅 현장업무 추진	11,500	
	○청년창업농 시군 현장 컨설팅 지원	33,00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소계(19개 사업)	2,235,068	33.5%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14,750	
	○4-H 양성교육	14,200	
	○4-H 중앙야영대회	150,000	
	○4-H 학습단체 행사	96,000	
	○신규 및 여성4-H회원 교육	15,300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51,000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도민참여)	400,000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06,620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22,95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활용 기능교육	17,000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지원	6,503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	3,645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천 원)	비중(%)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운영	26,100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	100,000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585,000	
	○한국4-H 교육지원	8,000	
	○한국4-H 교육지원 공모심사	3,000	
	○한국4-H 교육지원 행사운영	5,000	
	○한국4-H 교육지원 현장지원	10,000	
	총합계(31개 사업)	6,680,598	100.0%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 청년농업인 관련 부서별 정책영역 예산지원 현황(〈그림 3-1〉 참고)

-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영역별 지원부서를 살펴보면,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4개 부서가 12%를,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에 3개 부서가 14.2%를, 생활환경 정착 영역에 2개 부서가 69.8%를, 복지 및 문화에 1개 부서가 4%를 지원하고 있다.
-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사업개수로만 보면,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다. 이외에도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친환경청년농부사업과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서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바우처(1인 20만 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3-1〉 충남의 청년농업인 부서별 정책영역 예산지원 현황(2022년 본예산)

(단위 : 천 원, %)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단계별 예산지원 현황(<표 3-6> 참고)

-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총 4개 단계인 “관심 및 결심단계→준비단계→유입 및 성장 단계→정착 및 자립 단계”로 구분하였다.
- 정책단계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총 31개 사업 중 유입 및 성장 단계에 22개 사업, 7.9억 원을, 정착 및 자립 단계에 9개 사업, 58.9억 원을 지원한다.

<표 3-6>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단계별 예산지원 현황(2022년 본예산)

(단위 : 천 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천 원)
유입, 성장 단계	소계(22개 사업)	789,578(11.8%)
	○4-H 및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114,750
	○4-H 양성교육	14,200
	○4-H 중앙야영대회	150,000
	○4-H 학습단체 행사	96,000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30,000
	○신규 및 여성4-H회원 교육	15,300
	○여성·청년농업인 정책 홍보	8,500
	○청년 창업농 시군 현장 컨설팅 지원	33,000
	○청년 창업농 컨설팅 추진 및 전산용품 구입	21,500
	○청년 창업농 컨설팅 현장업무 추진	11,500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	22,950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지원	6,503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	3,645
	○청년농업인 창농 신성장 활동 행사운영	26,100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및 운영관리	24,000
	○청년후계농업인 시군심사및모니터링단 운영	86,000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39,780
	○한국4-H 교육지원	8,000
	○한국4-H 교육지원 공모심사	3,000
	○한국4-H 교육지원 행사운영	5,000
	○한국4-H 교육지원 현장지원	10,00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59,850
정착, 자립 단계	소계(9개 사업)	5,891,020(88.2%)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	51,000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192,000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도민참여)	400,000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기반조성	606,62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활용 기능교육	17,000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	100,000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585,000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709,000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	230,400
총합계(31개 사업)		6,680,598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단계별 정책영역 예산지원 현황(〈표 3-7〉 참고)

- 유입 및 성장 단계로서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가장 많은 정책역량인 12개 사업, 3.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생활환경 정착 영역, 복지 및 문화 영역,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 정착 및 자립 단계로서 생활환경 정착 영역에 가장 많은 정책역량인 3개 사업, 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과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에 동일하게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3-7〉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단계별 정책영역 예산지원 현황(2022년 본예산)

(단위 : 개, 천 원, %)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개수	예산액(천 원)	비중(%)
유입, 성장단계	소계	22개 사업	789,578	11.8%
	영농교육 및 컨설팅	12	335,880	5.0%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1	30,000	0.4%
	생활환경 정착	6	154,748	2.3%
	복지 및 문화	3	268,950	4.0%
정착, 자립단계	소계	9개 사업	5,891,020	88.2%
	영농교육 및 컨설팅	3	468,000	7.0%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3	915,400	13.7%
	생활환경 정착	3	4,507,620	67.5%
총합계		31개 사업	6,680,598	100.0%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3. 농정관련 부서 외의 정책·사업·예산·조직 현황

● 청년농업인 관련 부서별 정책 혹은 사업(예산) 현황(〈표 3-8, 9, 10, 11, 12 참고)

-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청년센터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사업은 크게 5가지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주거·금융형, 생활·복지형, 정책참여형 - 이다. 부서별로 제각기 시행하다 보니 일부 중복지원되는 사업, 유사한 사업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 취업지원형의 경우, 12개 사업으로서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청년과, 문화정책과,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국제통상과, 기획평가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분야, 문화예술 기획자 발굴 분야, 도시청년농부 발굴 분야이다(〈표 3-8〉 참고).
- 창업지원형의 경우, 11개 사업으로서 소상공기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문화정책과,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식량원예과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분야와 문화산업 분야의 청년인재 양성, 청년창업농업인 발굴·육성·정착지원 분야이다(〈표 3-9〉 참고).
- 주거·금융형의 경우, 4개 사업으로서 청년정책과에서만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및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 주거 관련 분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표 3-10〉 참고).
- 생활·복지형의 경우, 4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 문화정책과,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문화예술 분야, 커뮤니티 분야이다. 문화 부분의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농촌 현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고 한다(〈표 3-11〉 참고).
- 정책참여형의 경우, 4개 사업으로서 공동체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치 분야, 노동자 권리보호 분야이다. 반드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표 3-12〉 참고).

〈표 3-8〉 충남의 취업지원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교육훈련, 체험, 인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커뮤니티)	상호간 네트워크 활성화	경제실 일자리노동 청년과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육성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경제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도제 육성	사회적경제의 우수기술전수	경제정책과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구인구직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제실 일자리노동 청년과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사업	지역대학 인재 취업역량강화	
	희망이음 프로젝트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특성화고교 및 대학생 지원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인력 발굴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운영	농업농촌 이해도 증진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신규농업인 교육훈련비 지원	
전문분야 취업지원	GTEP(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무역 전문인력 양성	국제통상과
해외진출	해외 복수학위제 (Dual Degree Program)	캐나다 대학 학위과정 이수 및 취업연계	기획평가팀
	해외인턴십	해외 대학 인턴십 및 취업연계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자 : 2022.07.01.).

주 : 1. 15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여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추출함(이하 동일).

2. 농업·농촌 분야는 음영색을 칠해서 다른 분야와 식별가능하게 함(이하 동일).

〈표 3-9〉 충남의 창업지원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경영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	청년CEO500프로젝트 수료기업 대상맞춤형 마케팅 지원	경제실 일자리노동청책과
	문화산업 분야 청년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문화콘텐츠 창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창농스쿨	창업역량, 리더십 교육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국제농업 및 신기술 습득 교육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창농 및 영농정착 지원	농림부,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지원	
자본금 지원	초보농부 경영실천 농장 운영	영농실천농장 임대지원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
	1839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연간 최대 1,500만 원 창업자금 지원)	경제실 일자리노동청년과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시설기반지원(1인당 4천만 원)	식량원예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청년 창업자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경제실 일자리노동청책과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자 : 2022.07.01.).

〈표 3-10〉 충남의 주거·금융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주거지원	지역사회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제공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이자의 일부(3퍼센트)를 보전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충남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제공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학자금 지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체세대 지역인재육성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자 : 2022.07.01.).

〈표 3-11〉 충남의 생활·복지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건강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과 정신·신체건강이 취약한 청년층에게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건강문제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저출산보건복지 실 사회복지과
문화	충남을 이끌어갈 청년 문화예술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청년학교, 커뮤니티)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형식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알기와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인 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자 : 2022.07.01.).

〈표 3-12〉 충남의 정책참여형 청년 사업

구분	정책명	키워드	담당
정책제안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도내 청년의 협치인식 확산 및 도정참여 강화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권리보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권리구제 지원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권의 교육 추진	노동권의 보호와 관련한 정보제공형 교육(기초노동법 및 주요노사문제 사례 등)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권익보호관제도 운영	근로자 노동상담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자 : 2022.07.01.).

04 정책수요 분석

1. 수요조사 개요

- 조사명 : 충남 청년농업인 대상의 정책체감도 설문조사
- 조사목적 :
 - 충청남도 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정부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용도
- 조사기간 : 2022. 7. 25. ~ 7. 31.(7일간)
- 조사주관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농촌복지여성팀)
- 조사결과 : 669명 참여(충청남도 내 청년농업인)
 - 4-H, 청년농업인단체, 친환경청년농부, 청년후계농, 청년농부사관학교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폼을 활용한 모바일 설문(URL), 5점 척도
- 조사내용 :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25개 조사항목 조사(〈표 4-1〉 참고)
 - (기존 사업) 충청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정책체감도
 - (신규 사업) 청년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의견
 - (제도개선 건의) 중앙부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

〈표 4-1〉 설문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기존	1.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기존)
	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기존)
	3.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기존)
	4.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기존)

구분	조사항목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기존, 개소 당 5천만 원~1억 원 지원, 자부담 50%)
	6.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오픈형 창업공간) 조성 활용(기존)
	7.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기존/개소 당 2천만 원)
	8.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 육성 지원(기존)
	9.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기존)
	10.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지원(기존)
	11.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기존)
	12.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 창농학과)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기존)
신규	1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신규)
	14. 직거래 확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택배비 지원(신규)
	15. 충남 청년농업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마련(신규)
	16. 도내 청년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신규)
	17.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신규)
	18. 청년농업인 공유공간 조성(신규)
제도개선 건의	19.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농식품부) 제도개선 건의
	20. 청년농업인 경작권 보장을 위한 농지은행(농어촌공사) 임대정책 개선 건의
	21. 도내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농식품부) 요청 건의
	2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식품부) 대출 담보인정 범위 확대 건의
	23. 충남 내 '청년농촌보급자리' 확대 조성(농식품부) 건의
	24. 신규 청년농 선도농가 교육, 훈련비(실습) 지원(농식품부) 신규사업 요청
	25. 청년후계농 농업회사법인 취업 제한제도(농식품부) 완화 건의

주 : 저자 작성함.

2. 수요조사 결과 요약

● 충청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정책체감도(〈표 4-2〉 참고)

- 설문지에 제시한 12개 사업 중 정책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개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충청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정책체감도 우선순위

순위	사업명(기존)	응답결과
1순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개선	필요 89.5%, 불필요 3.2%
2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필요 84.9%, 불필요 6%
3순위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필요 86.3%, 불필요 7.6%
4순위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필요 78.9%, 불필요 7.9%
5순위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지원	필요 75.1%, 불필요 8.5%

자료 : 충청남도(2022), 미래세대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안), p.33.

● 청년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의견(〈표 4-3〉 참고)

- 설문지에 제시한 6개 사업 중 신규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 직거래 확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택배비 지원,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청년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우선순위

순위	사업명(신규)	응답결과
1순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	필요 84.5%, 불필요 7.2%
2순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택배비 지원	필요 78.9%, 불필요 8.3%
3순위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필요 78.3%, 불필요 9.7%
4순위	도내 청년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필요 78.2%, 불필요 8.7%
5순위	충남 청년농업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마련	필요 76.4%, 불필요 9.6%

자료 : 충청남도(2022), 미래세대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안), p.33.

● 중앙부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표 4-4〉 참고)

- 설문지에 제시한 7개 사업 중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이 가장 많은 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 청년농업인 농지은행 임대정책 개선 건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식품부) 대출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중앙부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우선순위

순위	사업명(건의)	응답결과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	필요 85.6%, 불필요 4.6%
2순위	청년농업인 농지은행 임대정책 개선 건의	필요 82.7%, 불필요 6.6%
3순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식품부) 대출 확대	필요 78.4%, 불필요 6.9%
4순위	도내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조성 건의	필요 77.9%, 불필요 8.5%
5순위	신규 청년농 선도농가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발굴	필요 77.3%, 불필요 7.5%

자료 : 충청남도(2022), 미래세대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민선 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안), p.33.

3. 세부 분석결과

1) (기존 사업) 충청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정책체감도

● 직접 자금지원, 기술지원과 같은 S/W분야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체감(〈표 4-5〉 참고)

- 충남의 기존 사업 중 청년농업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으로서 전체 응답자 669명 중 83.7%(560명),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은 79.8%(534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은 76.7%(513명),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은 73.7%(493명),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지원’은 70.7%(473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과 같은 S/W 분야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충남의 기존 사업 중 청년농업인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은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 창농학과)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으로서 전체 응답자 669명 중 28.4%(190명),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은 27.5%(184명),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은 26.2%(17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및 역량강화 등과 같은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 충청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정책체감 만족도

조사항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없음	전혀 도움안됨	합계	높은 순위	낮은 순위
1.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337	109	53	114	56	669	11	5
(비중)	50.4	16.3	7.9	17.0	8.4	100.0		
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	493	41	31	84	20	669	2	11
(비중)	73.7	6.1	4.6	12.6	3.0	100.0		
3.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511	49	15	87	7	669	1	12
(비중)	76.4	7.3	2.2	13.0	1.0	100.0		
4.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	405	88	28	123	25	669	4	9
(비중)	60.5	13.2	4.2	18.4	3.7	100.0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452	61	28	116	12	669	3	10
(비중)	67.6	9.1	4.2	17.3	1.8	100.0		
6.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오픈형 창업공간) 조성 활용	347	118	36	132	36	669	7	7
(비중)	51.9	17.6	5.4	19.7	5.4	100.0		
7.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364	105	35	137	28	669	6	8
(비중)	54.4	15.7	5.2	20.5	4.2	100.0		

조사항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없음	전혀 도움안됨	합계	높은 순위	낮은 순위
8. 청년농업인 품목별 연구동아리 육성 지원	345	113	42	135	34	669	8	6
(비중)	51.6	16.9	6.3	20.2	5.1	100.0		
9. 신규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347	101	37	146	38	669	10	2
(비중)	51.9	15.1	5.5	21.8	5.7	100.0		
10. 청년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기술지원	363	110	23	139	34	669	5	4
(비중)	54.3	16.4	3.4	20.8	5.1	100.0		
11. 친환경 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지원	343	113	38	135	40	669	9	3
(비중)	51.3	16.9	5.7	20.2	6.0	100.0		
12.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 창농학과) 사업 계획서 작성 교육 지원	325	120	34	156	34	669	12	1
(비중)	48.6	17.9	5.1	23.3	5.1	100.0		

주 : 높은 순위는 “매우 필요”와 “필요”를 합한 수치 중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 낮은 순위는 “필요없음”과 “전혀 도움 안 됨”을 합한 수치 중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을 말함(이하 동일).

2) (신규 사업) 청년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의견

● 공동의 공간, 특정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사업은 낮은 정책체감(〈표 4-6〉 참고)

- 충남의 신규 사업 중 청년농업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은 ‘직거래 확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택배비 지원’으로서 전체 응답자 669명 중 73.7%(493명), 이는 청년농업인은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제반 소요되는 비용(택배비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큼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은 72.6%(486명)로 나타나서 청년농업인의 정주환경 구축 및 주거문제가 청년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중요한 지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은 필요성과 불필요성 측면에서 모두 동순위를 보이고 있다.
- 충남의 신규 사업 중 청년농업인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은 ‘충남 청년농업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마련’으로서 전체 응답자 669명 중 29.4%(197명), ‘청년농업인 공유공간 조성’은 26%(174명), ‘도내 청년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은 25.3%(16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청년농업인은 신규 사업으로서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6〉 청년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만족도

조사항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없음	전혀 도움안됨	합계	높은 순위	낮은 순위
1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료 지원	418	56	26	147	22	669	3	3
(비중)	62.5	8.4	3.9	22.0	3.3	100.0		
14. 직거래 확대를 위한 청년농업인 택배비 지원	408	85	29	120	27	669	1	6
(비중)	61.0	12.7	4.3	17.9	4.0	100.0		
15. 충남 청년농업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마련	344	94	34	167	30	669	6	1
(비중)	51.4	14.1	5.1	25.0	4.5	100.0		
16. 도내 청년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382	88	30	141	28	669	4	3
(비중)	57.1	13.2	4.5	21.1	4.2	100.0		
17.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406	80	28	118	37	669	2	5
(비중)	60.7	12.0	4.2	17.6	5.5	100.0		
18. 청년농업인 공유공간 조성	345	102	48	135	39	669	5	2
(비중)	51.6	15.2	7.2	20.2	5.8	100.0		

3) (제도개선 건의) 중앙부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

●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도개선 시급(〈표 4-7〉 참고)

- 충남의 청년농업인이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로서 전체 응답자 669명 중 77.7%(520명), ‘농어촌공사의 청년농업인 경작권 보장을 위한 농지은행 임대정책 개선 건의’는 74.4%(498명),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담보인정 범위 확대 건의’는 73.1%(489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 충남의 청년농업인이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측면에서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도내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농식품부) 요청 건의’로서 전체 응답자 669명 중 27.4%(183명), ‘청년후계농 농업회사법인 취업 제한제도(농식품부) 완화 건의’는 26%(17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4-7〉 중앙부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만족도

조사항목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없음	전혀 도움안됨	합계	높은 순위	낮은 순위
19.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농식품부) 제도개선 건의	455	65	18	118	13	669	1	7
(비중)	68.0	9.7	2.7	17.6	1.9	100.0		
20. 청년농업인 경작권 보장을 위한 농지은행(농어촌공사) 임대정책 개선 건의	426	72	22	127	22	669	2	6
(비중)	63.7	10.8	3.3	19.0	3.3	100.0		
21. 도내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농식품부) 요청 건의	347	104	35	144	39	669	6	1
(비중)	51.9	15.5	5.2	21.5	5.8	100.0		
2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식품부) 대출 담보인정 범위 확대 건의	391	98	26	134	20	669	3	5
(비중)	58.4	14.6	3.9	20.0	3.0	100.0		
23. 충남 내 ‘청년농촌보급자리’ 확대 조성(농식품부) 건의	390	91	30	131	27	669	4	4
(비중)	58.3	13.6	4.5	19.6	4.0	100.0		
24. 신규 청년농 선도농가 교육, 훈련비(실습) 지원(농식품부) 신규사업 요청	371	102	28	146	22	669	5	3
(비중)	55.5	15.2	4.2	21.8	3.3	100.0		
25. 청년후계농 농업회사법인 취업 제한제도(농식품부) 완화 건의	346	105	44	142	32	669	6	2
(비중)	51.7	15.7	6.6	21.2	4.8	100.0		

4) 기타 주관식 의견

● 전체 요약

- 주관식 의견들을 농지 분야,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교육 분야,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그 외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지 분야 : 청년농업인이 농사지를 농지 기반 확보 필요
②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 청년농업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기반 확보 필요
③ 교육 분야 : 청년세대 수요와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내용의 답습 지양
④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 각종 정책지원 방식의 문제 개선(자부담 비중 축소, 너무 많은 제약 불필요 등), 정책지원 내용의 문제 개선(H/W보다 S/W 중심 강조),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높은 문턱 개선, 다양한 지원대상자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공정성 제고(승계농과 비승계농 간 역차별 문제, 청년농과 비청년농 간 역차별 문제, 일부 특정인에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지양)
⑤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신중한 접근 필요
⑥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 필요, 안정적인 생계를 누릴 수 있도록 농사 외 겸업활동 인정과 다양한 일자리 확보 필요
⑦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반 확보 필요
⑧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 복지, 의료, 육아돌봄 등 종합적인 생활기반 확보 필요
⑨ 그 외 분야 : 청년 연령기준 상향 조정 필요, 중복지원 사업 지양, 주체별 역할 구분하여 생각

주 : 저자 작성함.

● 농지 분야

- 농작물 판매보다는 농사지를 농지가 더 필요한 게 현실
- 농지은행에서 청년창업농에게만 농지임대의 무조건적인 우선권 부여는 다른 청년농업인에 대한 역차별
-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농지임대) 개선 필요

●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 임대든 매매든 주거할 수 있는 매물이 없음
- 청년농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착하고 자리잡을 수 있는 대책 필요
- 청년농업인을 농촌에 유입시켰으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귀농인은 주택을 보조해 주지만 후계농은 보조가 없어 어려움
- 귀농에 도움이 되는 주거마련과 토지임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

● 교육 분야

- 컨설팅 사업 최소화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확충 필요
- 청년농업인에 선정되지 않으면 혜택이 없고, 후계농이나 시간 남아서 교육 등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 인맥 위주의 사업에 대한 비판
-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 필요
-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농업인 본인의 의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한 교육 위주의 사업 필요(H/W 지원보다는 교육위주의 S/W 필요)
- 매년 반복되는 교육 말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절실히 필요
- 기존 청년 농부에게도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지방에 살면 교육의 기회와 질이 떨어짐
- 청년들이 농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운영 필요
- 교육 이수시간 축소 필요
- 기존 지역민인 선배농가에게는 의견이 각각 상반되고 달라 배우기 힘들고, 공공기관에서 인증된 전문가(실제 영농 경험인)로 부터 교육이나 노하우 전수 등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
- 청년농업인을 위한 자격증(면허증) 교육 지원 필요(예. 농기구, 지게차, 포크레인 등)
- 무리한 세금 낭비 말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인재를 육성할 필요
- 농업 대학 등에서의 교육내용과 현실과의 괴리

●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 후계농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금리) 인하 필요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축소 필요
- 귀농·귀촌 등을 통해 농촌으로 유입되는 청년농업인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생각
-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있어 담보능력에 따른 융자 금액의 편차가 매우 심함
- 청년창업농 정착자금 및 지원기간 확대 필요, 정책지원금 지원비용 및 사용처 확대 필요
- 정착지원금의 지급시기의 문제(뚜렷한 목표가 없는 어린 청년농업인의 경우 정착을 목표로 사용한다기보다 공짜로 받는 지원금을 받기에 급급한 현실)
- 창업농과 승계농(후계농)의 확실한 구분 필요(예. 고소득 농업인의 자녀들이 청년농업인 타이틀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혜택받고 있어서 일반 청년농업인들의 기회 박탈)
- 승계농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됨. 신규농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가능성이 크고 승계농은 계속 농사를 지을 청년들임
- 시설지원의 경우 입찰을 받아서 업체선정 하는데 가격책정이 일반시세와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불만

- 보조사업으로 빛의 족쇄가 채워졌다고 느낌(자부담이 있는 용자 보조금으로 청년 빚쟁이 생성)
- 매번 받는 사람만 지원과 혜택 받아가는 문제, 4-H 특혜지원은 관행적 비리만 만들뿐
이므로 폐지 필요,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평등한 지원 필요
- 정책들이 신규 정착 귀농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기존 젊은(기성)농업인은 지원·혜택에서
소외 경향이 있음(청창농 위주 지원과 혜택을 후계농이나 일반 청년농업인에게 부여)
- 청년후계농이 부모의 농지를 임차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문제
-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택배비 지원, 영농자재 전용 구매바우처 신설 등
- 시설, 건축물(H/W) 지원 규제 완화 필요
- 축산, 수산 분야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부족

●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 시군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 또는 임대 후 판매형 스마트팜 시설 필요
- 스마트팜 지원은 다 빚이고 지원도 농협에 잘 보여야 받을 수 있음. 좀 더 농촌에 살
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신규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현 농정 반영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
-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본설비 지원도 확대 필요(예. 전주, 인터넷, 전력보급 등 통신
기반, 난방시설 지원 연계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대출에 담보로 비닐온실은 시설물이 아니므로 등기하지 못함

●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소득 안정화 촉구
- 대출상환이 늘어나면 취업제한을 풀어 농업의 소득으로 정책자금 상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인건비, 농자재, 농지비용 상승으로 현재 농업과 일일 근로 등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
-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청년농업인을 병행하는데 라이브커머스, 청년창업농 협업 사
업, 지자체 청년창업 오픈오피스 사용 등 스마트 청년농업인 활동에 제한이 많음
- 병무청 및 농림부 등 간 협업 필요
- 직장에 다니면서(겸업활동)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지원 필요
- 이촌향도의 고착과 외국인노동자 대체 등으로 농촌 일자리 부족과 농경사회의 부흥을
위해 청년에게 농업에 대한 지원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장려할 필요

●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 청년동아리 모임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를 희망, 농촌에 단체모임(4-5명)을 할 정도의 청년이 없는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대책 축소 필요
- 지원사업(정책)의 홍보·확대 필요(문자나 SNS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내)
- 지역 내부의 장터나 청년 소통의 장 필요, 친목활동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필요, 마케팅 지원 절실
- 청년농업인과 도시에 판매·홍보·디자인에 실력이 있는 청년들과의 협업 필요(예. 젊은 인플루언서-창업농, 청년농 등)
- 농업경영에 필요한 인력알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 노력 필요
- 4-H 연합회 가입하여 활동을 통해 지역 리더십 강화 및 정보교류 할 수 있는 연결고리 필요

●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 대한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
- 중장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특히 의료 및 인력지원사업 절실히 필요
- 신혼부부나 아기들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 그 외 분야(연령 기준)

- 청년농업인 나이 기준 현실에 맞게 재조정(확대) 필요, 즉, 국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말장난과 같이 청년농업인, 후계농, 창업농으로 구분지어 농음으로서 정착 지역에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나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 필요

● 그 외 분야(정책방향, 주체별 역할)

- 각종 지원정책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 농업이 병드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 사업 선정 후 사후관리 반드시 필요
- 궁금한 점이 있어 설명을 요구하면 담당자들이 성실히 답변해 주길 희망
- 사업을 도와줄 공무원들이 1년마다 바뀌니 매번 바뀔 때마다 번거로우므로 오랫동안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인사하길 희망
- 사업의 내용이 겹치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기존 사업을 파악하여 추가로 신규 사업 발굴을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길 기대

05 분야별 실태분석

1. 사례로 보는 실태

-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에피소드 1,2,3〉 참고)
 -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현황 및 문제점은 ‘농지기반, 정주기반, 청년농업인 유형에 따른 차등적 정책접근 필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실제 청년농업인 초기 정착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농지확보, 영농자금확보, 정주여건, 주택·복지·문화·의료·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여군으로 귀농한 A씨(38세), 천안시로 귀농한 B씨(39세), 금산군으로 귀촌한 C씨(33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에피소드 1〉 청년농업인 정착과정에서 애로사항 : 농지 분야

A씨(38세)는 3년 전 부모님이 계시는 충남 부여군으로 귀농했다.	나홀로 귀농, 승계농
최근 정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많다고 들었고 딸기농사가 소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같이 서울 직장생활을 접고 내려온 것이다.	농업보조지원사업의 유혹
마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후계농 대상으로 최장 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준다하기에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시작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농사지으려고 하니 농지가 필요한데 선뜻 농지를 빌려주려 하는 이가 없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농지를 알아보니 자식들한테 상속할 예정이라서 당분간 농지를 빌려주는 대신 실경작은 어르신 본인이 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내건다(8년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확보의 어려움
급한대로 그러겠노라고 했지만 A씨는 법적 농업경영체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여러 가지 정책지원에서 배제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어려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못하였기에 농협 정조합원 가입도 안 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도 받기 힘들다.	농업경영체와 농협조합원 가입
이에 더해 연간 120만 원이 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연간 80만 원이 되는 충남 농어민 수당 등 신청도 못하게 되었다.	공익직불금과 농어민 수당
청년농업인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은 A씨에게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그저 농촌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음에 절망한다.	농업보조지원사업 자격조건 불충분

주 : 저자가 선행연구, 언론기사, 정책간담회, 개별인터뷰 등을 토대로 재구성함.

〈에피소드 2〉 청년농업인 정착과정에서 애로사항 : 농사기반 분야

B씨(39세)는 연고지가 없지만 수도권과 인접하여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충남 천안시로 귀농하기로 결심했다.	홀로 귀농, 비승계농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나오는 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도 받게 되었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시작
어렵사리 1,500평 농지를 구하게 되었지만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하고 온실 자동개폐시설 및 온습도 자동제어기와 같은 최소 수준의 (스마트팜) 시설을 지어야 했다.	농업에 필요한 기초자본 투자 불가피
농지 구입비와 시설 투자비를 포함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양한 시설관련 지원사업이 있지만 자부담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은 불가피했다.	자본투자에 필요한 금융대출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자기돈 내고 시설하우스를 짓는 이는 거의 없고 보조금이 붙어야 한다고 들었다.	농업보조지원사업의 유혹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해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청년 무이자로 이차보전해준다고 해도 시설채소 팔아서 6년차 원금상환이 도래할 시기에 과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	부채와 농업소득
그리고 3년 이후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이 끊기면 우리 세 식구가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 걱정이 앞선다.	농업소득 불안정

주 : 저자가 선행연구, 언론기사, 정책간담회, 개별인터뷰 등을 토대로 재구성함.

〈에피소드 3〉 청년농업인 정착과정에서 애로사항 :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C씨(33세)는 남편과 함께 충남 금산군으로 귀촌하기로 결심하고 내려왔다.	가족과 귀촌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맘껏 뛰어놀던 향수가 그리워서 문화예술인 생활을 접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농촌에 대한 향수
C씨의 바람은 곧 태어날 아이가 어릴 적부터 자연환경과 충분히 교감하고 또래들과 마음껏 뛰어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농촌의 공익기능 수요(자연환경)
그리고 C씨 본인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을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소일거리라도 해 가면서 소소한 농촌 생활을 즐기고 싶었다.	마을공동체 일원
하지만 막상 농촌에 들어오니 세 식구가 살만한 적당한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빈집은 손볼 곳이 많아서 차라리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사실, 아이가 다닐 유치원이나 병원과도 가까워야 한다는 사실, 이 때문에 머물고 싶어하는 위치에 집을 마련하기란 여간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곤란한 정주여건
아이를 돌보는 시간 외에 C씨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일을 하고 싶었지만 관내 제조공장 사무직 외에는 일자리가 없다.	부족한 농촌 일자리
C씨의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고 싶지만 지역에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네트워크, 정보교류

주 : 저자가 선행연구, 언론기사, 정책간담회, 개별인터뷰 등을 토대로 재구성함.

②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1〉 참고)

- 주요 특징은 이전 세대의 귀농귀촌은 농업에 방점을 두었고 운동적 성향에 방점을 두었다면 현재 2030세대의 귀농귀촌은 다양한 관심거리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농촌지역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삶, 대안적인 삶·생태적인 삶·탈자본화된 소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삶,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농적 생활 욕구 등을 이유로 농촌지역 이주를 결정한다고 한다.
- 이에 따른 경향은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데 20대는 자신의 삶과 가치를 찾아서 경험해 가는 배움과 성장의 연장선상으로 고민, 30대 기혼자의 경우는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실현해가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어가며 정착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표 5-1〉 청년세대의 경향과 특징

주요 내용	요약
귀농귀촌 청년 중에는 농촌지역과 농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 생활인으로 정착하기보다는 농촌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한곳을 선택하기를 주저한다.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청년
기존에는 농촌이나 사회변화에 관심이 컸다면 지금은 자기 삶의 행복과 같은 개인적 요인(자신의 개성과 삶에 우선순위,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등)이 강하다.	삶의 행복과 같은 개인적 요인 방점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항상 갈구하며 도시에 있는 또래들과 같이 성장하길 바란다.	지역사회 이해 및 관계 중요성 고민
도시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농적 생활이 주는 성취감, 만족감과 결부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도시와 다른 농촌의 농적 생활 욕구
청년이 도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농촌에 그대로 가져와서는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다른 정서가 존재하는 현실
소득을 위한 농사보다 식생활 자급, 경작 자체에 의미를 둔 농사 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 소박한 생활, 생태적 삶을 위해서 귀촌하는 문화적 운동 경향도 보인다.	탈자본화된 농적 생활 욕구
이전 세대 귀농귀촌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물적 기반(토지, 집 등)이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자는 지역 내 물적기반이 거의 없다.	이전세대와 다른 물적기반 확보 차이
이전 세대가 전업농이 다수였다면 현재 세대는 농업 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20대와 30대별로도 농촌으로 이주하는 요인이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전세대와 다른 다양한 관심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유목민적 특성, 농촌과 농사에 대한 경험 부족, 농사지을 자본의 부족, 농사로 인한 소득을 얻기 힘든 현실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해야 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농사와 정착을 강요하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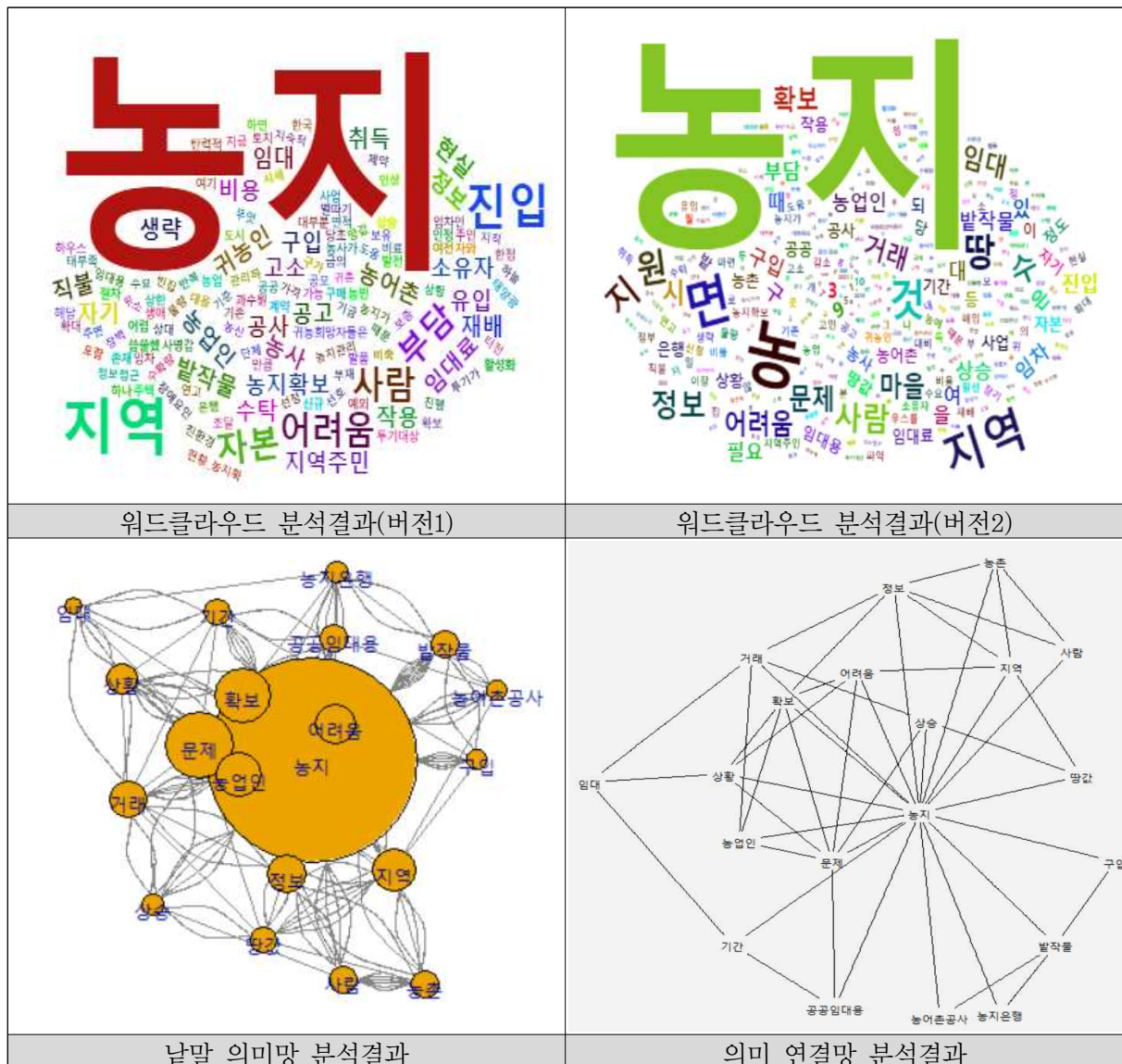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청년세대의 경향과 특징”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농지 분야

① 키워드 및 내용 분석 결과(〈그림 5-2〉 참고)

-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와 낱말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서의 농지확보 어려움, 농지정보 부족, 농어촌공사 및 농지은행 사업방식 아쉬움, 농지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 분야이다. 현장에서 지적하는 현실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분석결과가 일치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림 5-2〉 농지 분야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농지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석, 작성함.

②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2〉 참고)

-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과 열악한 정보 접근성, 농지구입 및 시설 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대표적으로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직불금으로 인한 농지 임대료 상승, 적절한 농지확보 어려움, 농지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실적을 저조,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부족, 농지은행 이용 시 농지사용에 있어서 제약조건, 유희지를 활용한 농지 임차 제공, 지자체의 관리감독, 농촌의 특유한 정서와 농촌 문화로 인한 농지접근의 어려움, 농지확보 및 구입의 높은 진입장벽, 불법 임대차 거래를 통한 농지 확보, 청년농업인과 농지접근 상반된 현실(장기임대 불가 등), 농지구입 및 시설투자 여력 부족, 임대농지에서 친환경농사를 할 수 없는 한계 등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기반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지유통화, 다양한 세제혜택, 농지임대차 및 매매 정보 수집·관리 정확성,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농지 공급, 농지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 이용관점으로 접근, 농지관리방식 및 지역 내 주체 설정 등이다.

〈표 5-2〉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귀농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농지 문제였다. 귀농을 결정할 당시 귀농 붐이 일었던 시기라 땅값이 소폭 상승한 시기였다. 해당지역의 경우 현지인 거래는 7만 원선이었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9~11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현재 9~10만 원선이다(김기홍, 2019).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청년농업인의 농지에 있어서는 농지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다(김기홍, 2019;임소영 외, 2021).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청년농들이 농지 취득 시 부담하는 자기비용 부담분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생애 첫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만 975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렵다(농축유통신문, 2022).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일단 농촌 지역에 새롭게 정착하여 농사짓는데 가장 힘든 점은 비싼 땅값이다. 지역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현재의 지역을 선택해 B면에 집을 지었다. A면 하우스까지 차로 10분 정도 거리이다(김기홍, 2019).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많아지면 농지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밭을 빌릴 때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많이 비싼 편이었는데 땅 주인은 직불금을 받으니까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하더라. 맞는 말이었지만 결국 직불금의 상승이 임대료 인상을 불러 온 것 같아 씁쓸했다(한국농어민신문, 2022).	직불금으로 인한 농지 임대료 상승
땅을 사서 자기가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1,500평 면적을 잡았을 때 견적을 최소한 3억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요. 하지만 귀농 초기에 이만한 금액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김기홍, 2019).	적절한 농지확보 어려움
여기에 한정된 농지를 구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청년농들이 원하는 농지는 대부분 고소득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득 밭작물을 재배할 농지는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농축유통신문, 2020).	적절한 농지확보 어려움

주요 내용	요약
대체로 논을 구입하여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 그나마 기간을 길게 두면 적당한 농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김기흥, 2019).	적절한 농지확보 어려움
농지투기가 여전해 농사짓기 좋은 땅은 이미 도시 사람들이 구매해 간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태양광 발전소를 들이거나 놀리고 있는 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22).	적절한 농지확보 어려움
E씨는 그간 농업과 관련한 활동을 해온 덕에 온 좋게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도움으로 괜찮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김기흥, 2019).	농지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
기존 농업인 간 거래 선호현상으로 인해 청년농업인, 특히 연고가 없는 청년농업인은 농지 거래 정보를 획득하거나 거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임소영 외, 2021).	농지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
농지에 대한 정보는 마을 이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마을이장과 친하게 지내고 마을일을 잘 도우면 농지접근도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을이장과 잘 못 지내면 농지를 확보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충청남도, 2022).	농지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
지역에 연고없이 진입하려는 경우 발품을 팔아 숙소를 찾아 나서게 된다. 청년이 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도움 없이 홀로 지역에 진입하려고 할 때 빈집이나 농지정보를 알기 어렵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 얻기도 쉽지 않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농지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
정부가 주요 농정사업으로 내세우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은 최근 3년간 청년농의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 비율이 내리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2019년에는 신청 대비 67.2%의 농지가 지원됐으나 2020년 50.9%, 2021년 46.7%로 비율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청년농 지원이 그만큼 증가한 셈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우선순위를 청년농에게 부여한다는 원칙이 어긋난 결과여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확대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농민신문, 2022).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실적률 저조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차자와 계약을 원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공모 절차 생략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감소하고 있다(농축유통신문, 2022).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실적률 저조
무엇보다 농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지난 9월 기준 논 8,121ha(96%)인 반면, 밭(과수원포함)은 377ha(4%)로 청년농들의 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농축유통신문, 2020).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부족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시 쌀 때문에 발작물(타작물)의 제한이 있음(강제성). 발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기계와 판로 등의 고민이 필요한데, 현장의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서 유지 또는 전환 할 수 있는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충청남도, 2022).	농지은행 이용 시 농지사용에 있어서 제약조건
장기 임대가 어려워 안정적·장기적 농지 사용이 마땅치 않다는 점,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매입 및 임차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임소영 외, 2021).	농지은행 이용 시 농지사용에 있어서 제약조건
유휴지(도/시군) 활용하여 저렴하게 임차 제공이 필요하다. 읍면동에 있는 농지를 임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재원은 지자체에서 마련한다. 지역별로 특성을 파악한 후에 농지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충청남도, 2022).	유휴지를 활용한 농지 임차 제공, 지자체의 관리감독
농촌의 정서는 새로 들어온 낯선 사람에게 농지를 선뜻 내어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지켜보고 파악하는 정보 탐색기를 가진다. 그게 농촌의 문화다(충청남도, 2022).	농촌의 특유한 정서와 농촌 문화로 인한 농지접근의 어려움
우선은 농지확보에서부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귀농희망자들은 상대적으로 귀농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는 반면, 해당 지역은 땅값이 큰 폭으로 올라서 신규 귀농인 유입이 쉽지 않고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도 농지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농지확보 및 구입의 높은 진입장벽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진입과 동시에 주택, 농지구입이 어렵다.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농지확보 및 구입의 높은 진입장벽

주요 내용	요약
주 작목은 깻잎이고 감자, 당근, 고추, 상추도 일부 심고 있다. 하우스를 두 곳에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로 1년에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임대 거래를 한 상황이고 임대 기간은 8년이다(김기홍, 2019).	불법 임대차 거래를 통한 농지 확보
장기 임대가 어려워 안정적·장기적 농지 사용이 마땅치 않다는 점,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지 매입 및 임차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임소영 외, 2021).	청년농업인과 농지접근 상반된 현실(장기임대 불가 등)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견, 농지 확보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김기홍, 2019).	청년농업인과 농지접근 상반된 현실(장기임대 불가 등)
귀촌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사명감을 갖길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폐기 땅이라도 구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를 구할 수가 없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농지구입 및 시설투자 여력 부족
토지나 집 같은 자본의 부재하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농지구입 및 시설투자 여력 부족
농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땅을 일구어 놓으면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일의 반복되었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니 친환경농사가 어렵다. 고투입 비료농사로 수확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임대농지에서 친환경농사를 할 수 없는 한계

자료 : 1. 충청남도(202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화마당(2022.07.15.).

2. 농민신문(2022.08.24.), “정부 뭉치돈 들어간 사업 추진 ‘쟁걸음’ 없고 ‘소걸음’만”(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61624/view?site_preference=normal, 검색일자 : 2022.08.24.).
3. 농축유통신문(2022.08.11.), “청년농 농지확보-온실 설치 자금 지원 확대”(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63>, 검색일자 : 2022.08.15.).
4. 농축유통신문(2022.04.05.),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기회 더 확대된다.”(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13>, 검색일자 : 2022.08.15.).
5. 한국농어민신문(2022.03.02.), “농정공약 집중해부 ③청년농업인이 본 농정공약 [2022 대선 연속기획] “농촌 청년의 삶 관심 있다…새로울 것 없는 재탕공약 실망”(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606>, 검색일자 : 2022.08.15.).
6.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농축유통신문(2020.10.16.), “[뉴스픽업] 청년농 없는 농업.농촌 미래는 없다.”(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8>, 검색일자 : 2022.08.15.).
8. 김기홍(2019),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9.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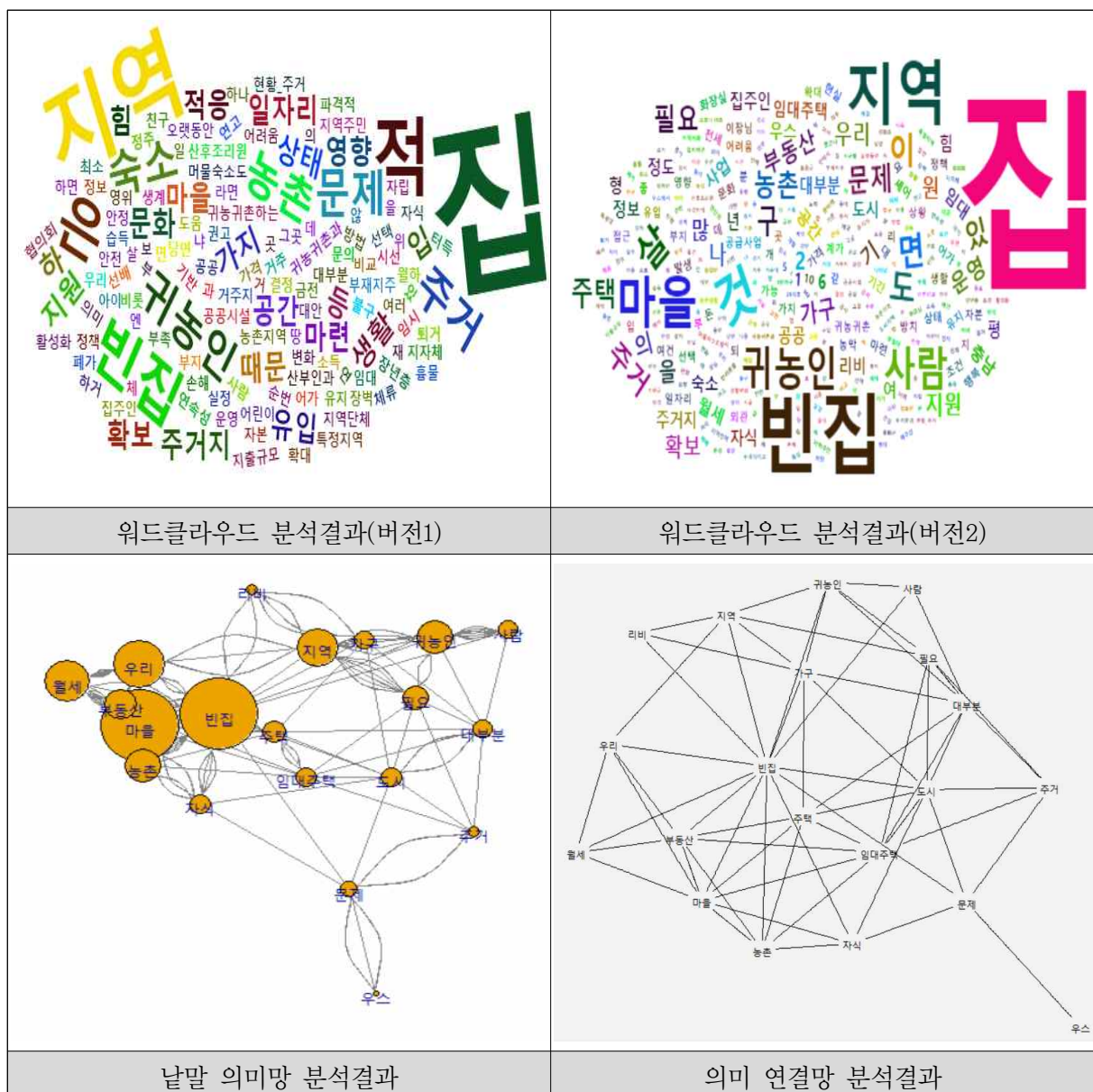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농지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① 키워드 및 내용 분석 결과(〈그림 5-3〉 참고)

-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와 낱말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촌지역에 많은 빈집, 귀농인들에게 적합한 숙소 부족, 생활할 공간 부족, 유입을 위해서 적절한 주거지 확보 필요,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취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3〉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석, 작성함.

②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3〉 참고)

-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주택수요와 농촌지역에서의 주택공급 간 불일치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 첫째, 1인 가구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귀농귀촌주택지원 및 청년임대주택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한계, 도시지역 중심으로 짓고 있는 접근성 부족 및 입지선정의 한계,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는 청년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물량확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둘째, 주택(빈집)수요에 대한 인식 격차, 청년문화와 주택 간 인식 격차 등 주택에 대한 수요와 정책공급 간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셋째, 농촌 특성 상 주택 정보접근성이 취약하여 부동산 업체가 아닌 마을이장을 통한 주택정보 접근, 입수경로가 거의 유일하다는 점은 농촌주택에 대한 종합정보의 수집, 관리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넷째,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빈집이거나 상속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자식 의지로 인하여 팔지 않거나 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집이 많다는 점이다.
- 다섯째, 청년농업인이 임차인으로서 투자하거나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 외에도 토지나 주택과 같은 자본 부재,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의 한계(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청년농업인이 거주할 공간 부족), 외지인(청년농업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집 내놓기를 꺼려하는 문화 존재, 집주인과의 마찰, 거래의사를 가진 주택소유자 찾기 한계 등이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이 선호하는 거주지역 특성 이해 필요, 청년자립 개념 확장 필요, 청년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조건 이해 필요, 지역을 탐색하고 정주하기 전 공간으로서의 임시거처 역할을 하는 장소 필요, 지역기반 숙소마련과 일자리 동시 조건 충족 필요(직주환경 조성), 정주여건 기반조성, 종합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및 근린 질의 양호한 지역 확보 필요, 농촌주택확보를 위한 농촌주택 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 필요, 면 단위 임대주택 필요, 임시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막 규제 완화, 문화·의료·복지 등 종합적인 정주환경 구상 필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표 5-3〉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1인 가구로 지역에 내려오면 2인 이상의 가구가 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사비, 집수리비, 집들이비 등의 귀농귀촌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김현희, 2018).	귀농귀촌주택지원 사업대상자의 한계(1인 가구 지원불가)
수리된 빈집에 1년간 살 수 있도록 운영되는 ‘귀농인의 집’ 역시 2인 가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혼자 내려온 청년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김현희, 2018).	귀농귀촌주택지원 사업대상자의 한계(1인 가구 지원불가)

주요 내용	요약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은 대부분 도시 기준의 사업이고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1인 가구의 경우 접근이 힘들다(충청남도, 2022).	청년임대주택 사업대상자 및 입지선정의 한계(1인 가구 지원불가, 접근성)
충남의 꿈비채 같은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도시 근처에 있어 청년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 농지가 가까운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귀농한 1인가구 주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충청남도, 2022).	청년임대주택 사업대상자 및 입지선정의 한계(1인 가구 지원불가, 접근성)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 중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 생활편의 등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좋은 여건의 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나 부동산 여건(경기)에 따른 물건 확보의 한계가 있다(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는 청년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등 물량확보의 한계
지역사회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사업의 경우, 시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셰어하우스 확보 어려움 및 공실 발생 등 운영 상 차등적 문제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인 셰어하우스의 수요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꾸준한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는 청년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등 물량확보의 한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경우,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청년층(MZ세대)의 수요 증가로 기존 주거지원 정책 한계가 있다(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	주택수요와 주택정책 간 불일치
우선 자본이 충분치 않고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빈집의 선택지 또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마을을 돌아봐도 한 집 걸러 한 집은 빈집이지만 정작 구입하거나 빌려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거의 전무하다(김현희, 2018).	주택(빈집)수요에 대한 인식 격차
청년들이 살 집과 청년들이 원하는 집(지역에 나오는 빈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가보면 6.25직후 집들, 수리비가 더 나는 집들, 화장실이 푸세식이고 외부에 있는 집들, 보일러가 안되는 집들이 많다(김기홍, 2020).	주택(빈집)수요에 대한 인식 격차
부재지주와 빈집에 있어서는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정책이 나와야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을에 들어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고 폐가여서 흉물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빈집을 구하고 싶어 문의하면, 임대나 살 수 있는 집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농촌의 집 가격이 높지 않으니, 자식들이 잘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기 때문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22).	주택(빈집)수요에 대한 인식 격차
청년들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마을사람들은 개를 집안에서 키운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함부로 집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김기홍, 2020).	주택(빈집)수요에 대한 인식 격차
가장 큰 장벽은 숙소문제이다. 땅이나 집을 얻기 위한 정보습득이 어려우며 때로는 금전 손해를 입기도 한다. 집을 구하기까지 머물숙소도 구하기 힘들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주택 정보접근성 취약 및 마을이장을 통한 정보접근 유일한 통로
부동산이 없는 농촌에서 좋은 집을 얻는 것은 결국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정보전이 좌우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롭게 내려와 농촌생활을 탐색하고 있는 청년들은 정보에 접근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김현희, 2018).	주택 정보접근성 취약 및 마을이장을 통한 정보접근 유일한 통로
우리는 월세·전세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시골 특성상 매매 거래뿐인 부동산에서는 허탕을 치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우연히 동네 산책을 하던 마을 이장님과 마주치게 됐다. 이곳에 살아보고 싶다고, 돈이 없어서 월세·전세로 구해야 하는데 집이 없다고. 이장님은 우리가 기특하게 보이셨는지 직접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다. 우리가 오래된 빈집을 고쳐주는 전제하에 월세 10만원에 2년 또는 5년 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을의 집주인들에게 협상도 해주셨다(김혜진, 2022).	주택 정보접근성 취약 및 마을이장을 통한 정보접근 유일한 통로
임대로 살 수 있는 집은 노력하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되고 방치된 빈집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많이 든다. 이를 임차인이 큰 돈을 들여 고쳐 살기에는 무리가 있다(김현희, 2018).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빈집
여러 개의 빈집을 수소문해 돌아다니면 그 가운데 한정된 예산 안에 수리가 가능하고, 지원사업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서류가 깨끗하게 정리된 집은 2~3채도 되지 않는다(김현희, 2018).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빈집
방치된 빈집의 경우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설령 팔 의	자식 의지로 인하여

주요 내용	요약
향이 있더라도 상속 등의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그냥 묵여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김현희, 2018).	팔지 않는 집
집의 경우도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적어도 부모님 돌아가신 집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는 경우가 많다(김기흥, 2020).	자식 의지로 인하여 수리 못하게 되는 집
외관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부수지 못한다. 집주인이나 자식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외관유지 시켜 놓으려고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김기흥, 2020).	자식 의지로 인하여 수리 못하게 되는 집
마을에 빈집이 많은데 안 판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일단은 오려는 분들도 있고 이거 팔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안 판다(김기흥, 2020).	자식 의지로 인하여 팔지 않는 집
귀농인의 집보다는 잠시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이 지역이 맞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을 살펴보는 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김기흥, 2020).	지역 탐색 및 정주 전 공간으로서의 임시 거처 역할 장소 필요
귀농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인 이외로 농사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6개월 동안 공사일하러 온 사람도 귀농인으로 신청해서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 폐해도 있었다(김기흥, 2020).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의 한계
지자체에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개 청년들에게 순번이 가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시설도 귀농인협의회 혹은 여러단체에 대해서 지원하지만 청년들은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시선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의 한계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빈집을 주려고 하는 인식이지 그냥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오는 거는 받아주지 않는다(김기흥, 2020).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
농막에 대한 법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5평~6평 수준인데 약 10평 정도로 농막크기 확대, 철거 및 이동에 용이한 조건, 유연한 공공의 임대방식, 정화조 설치 가능한 조건 등이 필요하다(김기흥, 2020).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
면단위 공공임대 주택이 면 단위에 농지와 가까운 마을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임대주택이 모두 읍내, 도시지역에 있다 보니깐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농촌의 환경에 관심을 안 갖게 된다(김기흥, 2020).	면 단위 임대주택 필요
청년의 지역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와 일자리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지역기반 숙소마련과 일자리 동시 조건 충족 필요(직주환경 조성)
일단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지만 자립이 곧 수입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변화된 수입과 지출규모에 적응하고 적은 소득을 가지고서도 생활을 영위할 방법을 터득한 상태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청년자립 개념 확장 필요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주주환경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농촌 지역 간 청년농업인 분포의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거나 떠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을 탐색할 수가 있다(황정임 외, 2019).	청년농업인이 선호하는 거주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장년층의 귀농귀촌과 달리 청년들이 귀농귀촌하는 경우엔 오랫동안 거주할 집을 구하기보다 우선 체류할 수 있는 곳이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청년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조건 이해 필요
주거 부족이 큰 문제다. 주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빈집을 고쳐놓으면 집주인이 퇴거를 권고하는 적도 있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집주인과의 마찰
청년농이 기존 농촌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나 거래 의사를 가진 주택 소유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활용이 가능한 주택의 수도 제한되어 있다(임소영 외, 2021).	거래의사를 가진 주택소유자 찾기 한계
청년들은 선배 귀농인 집에 함께 살기도 하고 임시 숙소가 있는 경우 그곳에 머물면서 지역에 적응한다. 특정지역과 연고가 생긴 경우라면 지역 선택이나 기반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다. 연을 맺은 지역단체나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나 숙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지역기반 숙소마련과 일자리 동시 조건 충족 필요(직주환경 조성)
토지나 집 같은 자본의 부재(녹색사회연구소, 2015).	자본의 부재
지역에서 일은 하지만,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우리 지역의 경우만 해도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문화·의료·복지 등 종합적인 정주환경

주요 내용	요약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데 당연하지 않느냐?(한국농어민신문, 2022).	구상 필요
농촌문화공간, 공공어린이집 확대, 안전 주거지, 산후조리원 등을 비롯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22).	문화·의료·복지 등 종합적인 정주환경 구상 필요

자료 : 1. 충청남도(2022), 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2년 시행계획(안).

2. 충청남도(202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화마당(2022.07.15.).

3. 김혜진(2022.04.11.), “시골에서 집 구하려면 마을 이장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이로운넷 오피니언 테마칼럼 (출처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89>, 검색일자 : 2022.04.11.).

4. 한국농어민신문(2022.03.02.), “농정공약 집중해부 ③청년농업인이 본 농정공약 [2022 대선 연속기획] “농촌 청년의 삶 관심 있나...새로울 것 없는 재탕공약 실망”(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606>, 검색일자 : 2022.08.15.).

5.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기홍(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방안 연구, 전략연구 2020-16, 충남연구원.

7. 황정임.최윤지.최정신.정용경(2019), 청년농업인의 거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8. 김현희(2018.06.29.), “[농촌 2030, 그들이 사는 법] 청청년을 위한 빈집은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92>, 검색일자 : 2022.08.01.).

9.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교육 분야

① 교육사업 현황(〈표 5-4〉 참고)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중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은 만큼 예산, 조직, 인력 등이 집중 투입되고 있다.
- 하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내용만 봐도 대부분 “유입·성장단계, 정착·자립단계”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다. 탐색기 혹은 준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정책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5-4〉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예시

교육사업	교육 내용	교육 대상
4-H양성교육	· 유통교육, 전자상거래, 농산물 출하 정보검색 교육, GAP, 농가 재무관리 교육, 선진농업인 농업현장 견학, 학교 4-H 지도교사 양성, 4-H회원 지도능력 강화 등	영농정착 의지가 확고하고 4-H활동에 충실한 4-H 회원, 학교 4-H 지도교사 등
신규 및 여성4-H회원 교육	· 4-H기본교육, 신규·기존 회원간 소통교육, 여성회원 역량 강화 훈련 등	도 4-H 연합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_역량개발 및 기술지원 교육	· 역량개발교육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 신기술 교육 : 개발된 신기술,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 개발 컨설팅 등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 (교육형) 초기정착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전문기술 습득 교육(교육형+임대형) - 교육형 :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생육단계별 실습 및 체계적 이론교육 - 임대형 : 스마트팜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여 경영실습장으로 활용 · (기반조성) 지자체 보유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실습 할 수 있는 교육장(스마트팜) 조성 등 · (교육운영) 고품질 작물재배교육(창농과정+스마트팜 전문가 과정 등) - 창농과정 : 창농탐색교육, 재배이론실습, 현장인턴 실습, 비즈니스 플랜, 졸업 후 케어링 등 - 스마트팜 전문가 과정 : 재배이론, 재배실습, 장비운용, 안전교육 등	독립경영 예정자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본인명의로 영농기반이 없는 자
공통점	“유입·성장단계, 정착·자립단계”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	(초기 기반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주로 교육 대상

자료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22), 2022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 6. 청년농업인분야, pp.581~661.

②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5〉 참고)

-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농사기술 습득 및 멘토-멘티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사기술을 전수해서 농업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농촌에 스며들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 도시지역과는 다른, 생태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농촌의 대안적 문화에 대한 욕

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교육을 통해서 농적 가치를 확장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 도농연대 혹은 도농교류로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농사기술 습득과 관련하여 멘토-멘티 필요, 영농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정책개선 필요, 기술습득과 교류 등을 위한 실천농장 확산 필요, 지역기반의 실천농장 방식으로 체계화 필요, 친환경농업기반·지역정착 유인·교육 및 경제 기능을 달성하도록 지향해야 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표 5-5〉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근본적으로는 삶의 전 과정에서 농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교육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농이나 농진로 등의 개념도 같은 배경에서 등장했다.	농적 가치의 확장(교육 등)
농업, 농촌이나 지역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계기는 현재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농업, 농촌 관련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론적 계기는 도시 삶에 대한 회의감,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 생태적 삶에 대한 추구, 대안적 문화에 대한 추구하고 같이 현재 삶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농적 가치의 확장(도농연대, 도농교류 등)
농의 가치를 공간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귀농, 귀촌했다가 도시로 돌아온 청년들을 실패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과 달리 그러한 경험은 이후의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이자 자산이 된다.	농적 가치의 확장(도농연대, 도농교류 등)
농촌과 도시를 오가거나 도시에 살지만 농촌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농촌에 사는 것 등 삶에서 농적 가치를 구현하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농적 가치의 확장(도농연대, 도농교류 등)
반농반x 개념을 단지 일이나 직업 범주가 아닌 삶의 방식과 태도 측면으로 볼 수 있듯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혹은 도시에 살더라도 농을 삶의 중심 가치로 두고 살고자 하는 태도 또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적 가치의 확장(도농연대, 도농교류 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문화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희망제작소, 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① 농사기반 지원사업 현황(<표 5-6> 참고)

- 신규 창업농업인과 영농정착한 농업인에게 각각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 지원’사업은 다른 정책대상이지만 내용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 또한 영농정착 기술지원 사업과도 유사해 보인다.

<표 5-6>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기반 지원사업 예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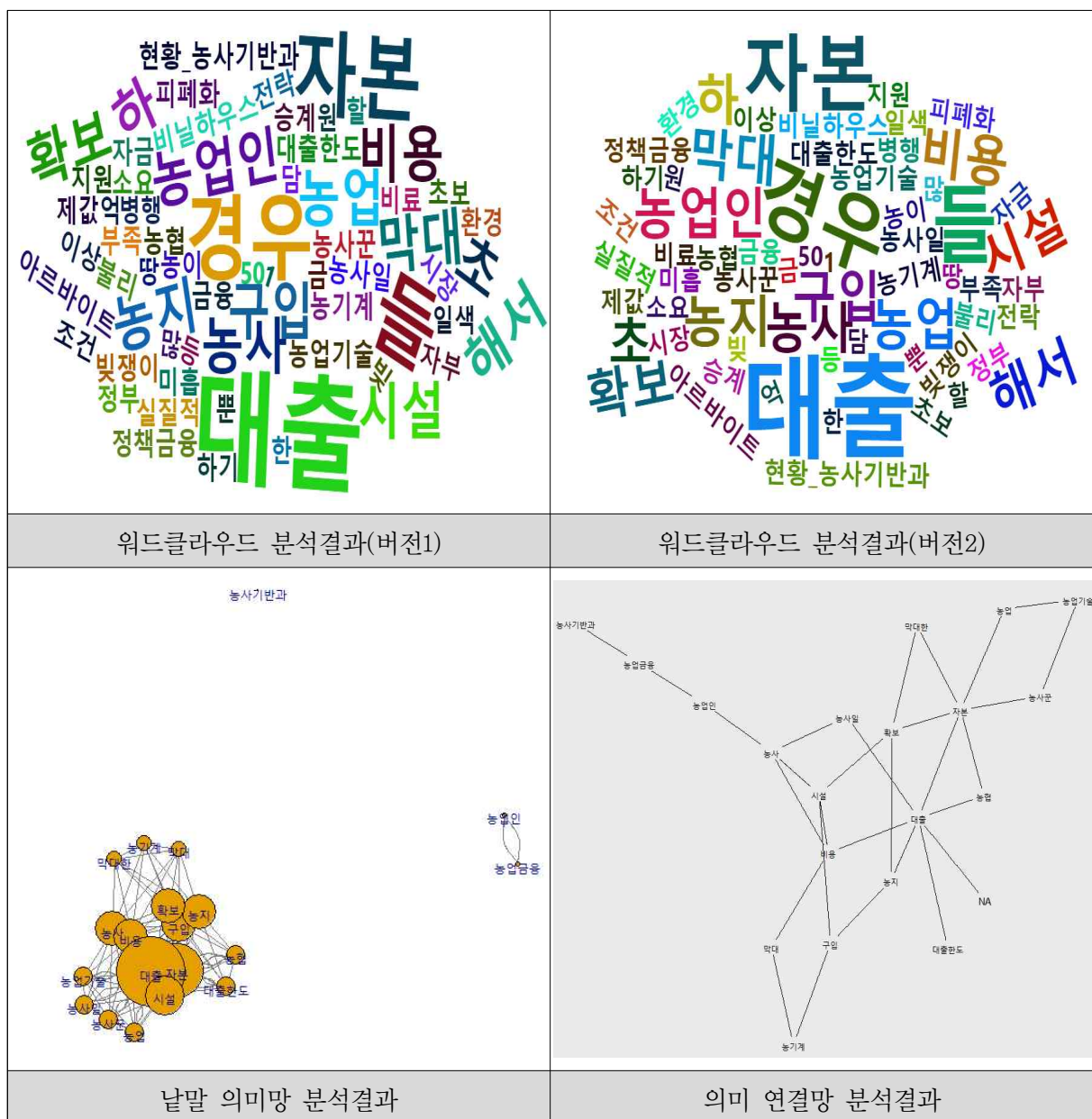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신규 창농)	시 군	사 업 명	작목	사업비(천원)				
	계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천안	축열숙성태의 후출가공기계 확충	축열소	1,770,000	265,500	619,500	885,000	
	공주	ICT기반 스마트 육묘장,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다점보온커튼)	멀기	80,000	12,000	28,000	40,000	
		고품질 수경 재배 시설 공사	멀기	90,000	13,500	31,500	45,000	
				70,000	10,500	24,500	35,000	
	보령	수도작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트랙터 구입	벼, 콩	100,000	15,000	35,000	50,000	
		수도작 대량비 절감 드론, 콤팩트 구입	벼,고구마	100,000	15,000	35,000	50,000	
	아산	쌀 소득증가를 위한 콤팩트 구입	수도작	100,000	15,000	35,000	50,000	
		신소득 작물 생산 기반 구축	양대파	100,000	15,000	35,000	50,000	
	서천	고품질 친환경 표고버섯 유통기반조성	표고버섯	100,000	15,000	35,000	50,000	
		다관 재배 기술 결합한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멀기	100,000	15,000	35,000	50,000	
	논산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멀기	80,000	12,000	28,000	40,000	
		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건조기 설치 및 창고 신축	수도작	90,000	13,500	31,500	45,000	
	당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트랙터 구입	수도작	100,000	15,000	35,000	50,000	
		벼식재배사 배양실 내부시설 시공 사업	표고버섯	100,000	15,000	35,000	50,000	
	금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스마트 온실 구축	꽃잎	60,000	9,000	21,000	30,000	
		고품질 멀기 생산을 위한 최적 광량 시스템 구축	멀기	100,000	15,000	35,000	50,000	
	부여	벼 직파재배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 도입	벼, 밀	100,000	15,000	35,000	50,000	
		수도작 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론 구입	벼, 밀	80,000	12,000	28,000	40,000	
	홍성	필기유형도 생산 보급을 위한 육묘장 스마트온실 신축	멀기	60,000	9,000	21,000	30,000	
	예산	효율적인 생산 증대를 위한 멀기 재배용 하우스와 육묘장 신축	멀기	100,000	15,000	35,000	50,000	
		꼭파 가공품 생산을 위한 설비시설 도입 및 작업장 신축	꼭파	60,000	9,000	21,000	30,000	
	○ (자본보조) 창농 기반시설 및 장비 등							
	○ (경상보조)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영농 정착 디딤돌)	시군	사 업 명	작목	사업비(천원)				
	계	-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배과원 맞춤 기계화 도입	배	1,060,000	159,000	371,000	530,000	
	천안	배과원 생력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농기계 도입	배	60,000	9,000	21,000	30,000	
		관선스마트농장을 이용한 유통시설 기반 조성	멀기	70,000	10,500	24,500	35,000	
	보령	유기농 낙농 조사료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낙농	100,000	15,000	35,000	50,000	
		친환경 양돈 인종을 위한 액상급이기 구입	양돈	100,000	15,000	35,000	50,000	
	논산	방울토마토 연중생산을 위한 스마트 수경재배 시설 조성	방울토마토	100,000	15,000	35,000	50,000	
		스마트팜 ICT 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	방울토마토	100,000	15,000	35,000	50,000	
	서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친환경 쌀 생산기반 구축사업	수도작	100,000	15,000	35,000	50,000	
		수도작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구입	수도작	80,000	12,000	28,000	40,000	
	홍성	경영비 절감을 위한 ICT 장비 도입 및 TMR사료배합기 설치	축산	100,000	15,000	35,000	50,000	
		TMR 배합기 매입으로 설비 품질 검증 및 생산 인력 교육	한우	100,000	15,000	35,000	50,000	
	태안	경영비 절감 및 인력 대체를 위한 농기계 구입	수도작	100,000	15,000	35,000	50,000	
○ (자본보조) 농업신기술 도입, 디지털 농업, 융복합 등 영농 업그 레이드를 위한 기반구축 및 장비 등								
○ (경상보조) 신제품개발, 포장디자인 개선, 유통판로 개척, 홍보 물 제작 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시군	사 업 명	작목	사업비(천원)				
	계	6개소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천안	지역 농산물 및 가공 인프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멜론	300,000	135,000	135,000	30,000	
	보령	농촌 치유관광 공간조성	수도작	50,000	22,500	22,500	5,000	
		업종별 유통개선과 고효율, 고품질 생산을 위한 타 위험 수경 재배	업종별	50,000	22,500	22,500	5,000	
	아산	사계절 다품종 멀기체형농장	멀기	50,000	22,500	22,500	5,000	
		업종별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	상추	50,000	22,500	22,500	5,000	
	부여	힐링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멀기	50,000	22,500	22,500	5,000	
					50,000	22,500	22,500	5,000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료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22), 2022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 6. 청년농업인분야, pp.602~630.

② 키워드 및 내용 분석 결과(〈그림 5-4〉 참고)

-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와 낱말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기계 구입 및 비닐하우스 시설과 같은 농사기반은 막대한 자본투자 필수,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불가피, 농사기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확보 필요, 대출로 인하여 빚쟁이 양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4〉 농사기반 분야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농사기반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석, 작성함.

③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7〉 참고)

- 주요 내용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은 농협 대출조건, 농사짓기 위해 초기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 투자 불가피, 빚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정책금융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7〉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기반 지원(자금)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농협의 대출을 알아보면 대출한도도 낮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이 있어야 하고 자부담도 50% 확보해야 한다.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모두 어려운 조건 일색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은 농협 대출조건
피폐화된 농업 시장 환경에서 농업기술이 미흡해서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고 초보 농사꾼에 자본없는 청년이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 빚을 갚기 위해서 농사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 비료, 비닐하우스 시설 등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은 농협 대출조건
승계농이 아니고서 처음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1억 원 이상 하는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농축유통신문, 2020).	농사짓기 위해 초기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
현재 농업금융은 농업인들에게 매우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역시 청년농업인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킨다(한국농어민신문, 2022).	빚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정책금융

자료 : 1. 한국농어민신문(2022.03.02.), “농정공약 집중해부 ③청년농업인이 본 농정공약 [2022 대선 연속기획] “농촌 청년의 삶 관심 있나…새로울 것 없는 재탕공약 실망”(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606>, 검색일자 : 2022.08.15.).

2. 농축유통신문(2020.10.16.), “[뉴스픽업]청년농 없는 농업·농촌 미래는 없다.”(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8>, 검색일자 : 2022.08.15.).

3.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농사기반 지원(자금)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① 스마트팜 지원사업 현황(〈표 5-8〉 참고)

- 시설원에 분야, 과수 분야, 축산 분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시설보급, 컨설팅, 온실신축 등이고 용자 및 자부담을 포함한다.
- 지원자격은 청년농업인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졸업하고 난 뒤 스스로 창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이다. 용자 및 자부담 조건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농업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표 5-8〉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기반 지원사업 예시 : 분야별 스마트팜 확산지원

구분	(시설원에 분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컨설팅)	(스마트팜 온실신축)		
총예산(백만 원)	3,500	6,840	410	80,000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목적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고품질 과수 생산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등),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 센서장비, 영상모니터링 장비)	축산농가에 사양, 환경관리의 자동화가 가능한 ICT 장비를 지원
지원자격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자동화 재배시설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철골,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 수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 등록한 자,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국고 30%, 용자 50%, 자부담 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②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9〉 참고)

-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지연(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임대형)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등), 청년교육생 불안감 고조, 스마트팜 청년창업 선발인원의 중도포기, 수혜대상의 소수에 집중, 스마트농업을 통한 데이터 체계 부족, 스마트팜 재배품목의

단순화, 일부 품목에 집중된 스마트팜으로 인해 기존 농업과의 차별성 부족, 경쟁구도 심화, 청년층 선발비율 및 취업률 감소로 사업성과 미흡, 지역주민과의 갈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영실습농장 기대 미흡,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기반 없는 청년육성 성과 창출 미흡하고 법과 제도 간 충돌 상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저조한 예산 집행율(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지은행 비축농지 우선 장기임대사업,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등)과 같은 점이다.

〈표 5-9〉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중 하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데 정부의 구상과 다르게 스마트팜 경영주 중 청년층은 최근 3년간 10% 내외로 정체되고 있다. 원인은 40세 미만 청년농들은 초기 투자비용, 전문교육, 농지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5세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이 많이 되는 이유이다(변재연, 2022; 한국농어민신문, 2019).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의 지연(청년층 유입 필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완공과 운영, 청년층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층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변재연, 2022).	임대형 스마트팜의 지연(청년층 유입 필요)
보육사업이 차질을 빚은 가장 큰 원인은 임대농장 조성 지연이다. 사업부지 마련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시행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단가 협의를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지연
인력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경우 수료생 대부분이 관련 분야에 취·창업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발 후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수혜 대상이 소수에 한정돼 향후 성과 가시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변재연, 2022).	스마트팜 청년창업 선발인원의 중도포기, 수혜대상의 소수(성과 가시화 노력 필요)
스마트농업 필수 요소인 데이터는 생산·환경·유통·소비 전반에서 수집·활용돼야 하는데 생산 데이터에만 수집이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농식품 기술 수준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스마트농업 관련 기계·시스템 기술 보강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변재연, 2022).	스마트농업을 통한 데이터 체계 부족
스마트농업 보급 품목이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참외 등 일부 작목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교육생의 재배품목도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변재연, 2022).	스마트팜 재배품목의 단순화(다양화 유도 필요)
스마트농업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기존 농업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생산량 증가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 정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장 수요처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변재연, 2022).	일부 품목에 집중된 스마트팜으로 인해 기존 농업과의 차별성 부족, 경쟁구도 심화
농촌진흥청의 스마트농업전문가 양성의 경우, 40세 미만 청년층 선발 비율 및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변재연, 2022).	청년층 선발비율 및 취업률 감소로 사업성과 미흡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원예 부문 스마트팜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서 향후 경영효율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도화 및 규모화된 스마트팜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변재연, 2022).	경영효율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도화 및 규모화 스마트팜 보급 필요
대형 국책사업이 이렇게 정부 주도로 추진되다보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둘러싼 갈등은 대상지역이 선정된 이후 오히려 더 커졌다.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과정에서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뒤늦게 사업내용을 인지한 해당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지연, 지역주민과의 갈등
스마트농업 산업인프라 구축의 핵심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청년창업보육, 기업의 실증지원 등에서 지장을 주고 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지연, 청년교육생

주요 내용	요약
으므로 향후 조속한 완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변재연, 2022).	불안감 고조
2기 교육생들의 평균 연령은 31.6세. 남성 88명(84.6%), 여성 16명(15.4%)으로 구성돼 있다. 비농업 전공자가 77.9%, 농업계 출신은 22.1%에 불과하다. 임대농장 조성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기생들의 상황을 전해들은 2기 보육생들은 혁신밸리 조성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지연, 청년교육생 불안감 고조
오리엔테이션에 1기생이 왔는데, 준비 없이 사업이 시작돼 본인들의 경우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경영실습농장 바라지 말고 현지 농장에서 돈 벌면서 배우라고 얘기하더라(한국농어민신문, 2019).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영실습농장 기대미흡
적어도 농식품부는 1기 보육생들의 상황도 알고, 혁신밸리 진척 상황도 뻔히 알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해 2기생을 더 많이 뽑은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지연, 청년교육생 불안감 고조
아무 소득 없이 20개월을 버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원래는 홍보물에 제시되어 있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이나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지연, 청년교육생 불안감 고조
경영실습 온실이 있어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 난감하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은데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20개월 동안 돈 한 톨 안 벌고 버티려면 애초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한국농어민신문, 2019).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지연, 청년교육생 불안감 고조
귀농이든 귀촌이든 언론에서 워낙 정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역대 농부에 대한 환상도 있고 농업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상은 원하는 농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신용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으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정부가 기반 없는 청년들을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일단 여건부터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한 건지 잘 모르겠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기반 없는 청년육성 성과창출 미흡
정부가 스마트팜 실적내기에 급급해 사전 준비도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부처나 기관 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제도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성급한 추진으로 법과 제도 간 충돌 상황
생활비 때문에 숙소 근처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농업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농업법인 취업을 알고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실습농장 제공이 당장 어려우면 취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을 적극적으로 매칭해 준다면, 뭔가 다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분노내세 민원이 있는 축사시설을 이전·스마트화하려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도 실제 집행된 금액은 4.9%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와 축사 주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농해수위는 환경영향평가나 지역 민원 등은 예산 편성 시점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라고 일축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자체 실행행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농민신문, 2022).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집행율, 지역민원 발생 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도 실제 집행률은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유는 신규사업이다 보니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나 지역에 부합하는 농업법인 풀이 갖춰지지 않아 매칭이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농업법인 입장에서는 신청이나 교부단계에서 농정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임금을 지급하고 나서 3~6개월씩 묶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꺼린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율
농어촌공사가 동 사업을 통해 매입·비축한 농지의 96%는 논, 3.1%는 밭, 0.07%는 과수원으로 임대 가능한 농지의 대부분이 논이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임대할만한 농지는 거의 없다. 더 큰 문제는 비축농지는 임대농지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구축에 핵심인 철골이나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시설물 설치의 불가능하다. 또 측고가 낮은 비닐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설치하더라도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 이를 담보로 한 자금 대출도 불가능하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농지은행 비축농지 우선 장기임대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

주요 내용	요약
1% 금리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 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하되 기존 대출과 달라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비재무평가만으로 대출을 시행한다고 홍보했다. 농신보 보증비율도 90%까지 올렸다. 그렇지만 청년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없거나 정부 설명처럼 여신절차가 쉽지는 않다. 해당조항에 부합한 자격 조건이 되면 대출이 진행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신용만으로 대출이 나가기 어렵다. 당연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채권보전 여부를 검토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19).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실적의 저조한 집행을

자료 : 1. 변재연(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사업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 농민신문(2022.08.24.), “정부 뭉칫돈 들어간 사업 추진 ‘쟁걸음’ 없고 ‘소걸음’만”(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61624/view>, 검색일자 : 2022.08.24.).

3. 농민신문(2022.06.22.), “‘이름만’ 스마트팜 ‘말로만’ 청년농 유입…고도화·확산 필요”(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57699/view>, 검색일자 : 2022.06.22.).

4. 한국농어민신문(2019.09.27.), “첫 단추 잘못 끼운 ‘스마트팜 혁신밸리’…앓 곳은 청년들만 속 탄다”(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013>, 검색일자 : 2022.08.10.).

5. 한국농어민신문(2019.09.03.), “스마트팜 ‘실적내기’ 조급증에 정책-제도 곳곳서 ‘엇박자’”(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448>, 검색일자 : 2022.08.10.).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① 소득안전망 지원사업 현황(〈표 5-10〉 참고)

-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창업농에게 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다만, 독립경영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이다.
- 영농경험이 없고 자금기반이 약하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해 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현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가능조건(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 체계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예를 들면, 매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평균 근로시간 등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농업특성 상 정착해서 소득을 올리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영농경력이 3년 초과일 경우 둘 다 사업대상에서 제외, 농촌의 인구특성 상 60대도 소위 ‘막내’라고 하는 가운데 만 40세 미만 계층을 청년농업인이라고 보기에 무리인 현실에서 농촌인구에 한해서 연령기준에 대한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영농경력 3년 이하는 정착하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영농경력 5년 이하 등으로 경력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내인지 확인함으로써 가구당 1명만이 청년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농지 소재지와 주거 소재지가 행정구역 상 인접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농업소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농외소득 창출활동은 불가피함을 이해할 필요, 그렇지 않다면, 농외소득 창출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소득안전망 장치의 적극 확대, 영농정착지원금의 대폭 확대 필요성 제기, 기수별 대상자가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끊기면서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 대상으로 사후관리 체계 및 지속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다.
- 특히 무자본, 무경험의 청년농업인이 3년 동안 자립하기란 상당히 버거운 기간이므로 국비로서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고 그 사이기간동안은 충남에서만이라도 지방비를 지원하여 사후 추가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 모색 등이 요구된다.

〈표 5-10〉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지원사업 예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월 최대 100만 원 - 근거 : 2017년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월평균 근로시간(166.3시간)=1,076,000원	매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평균 근로시간 등에 맞게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지원기간	· 3년	농업특성 상 정착해서 소득을 올리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지원 인원	· 농업경영체별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가 각각 등록하면 한 사람만 지급		* 일본의 경우, 최대 7년간 정착금 지원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영농경력이 3년 초과일 경우 둘 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신청가능조건 (모두 만족)	가. 연령기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농촌의 인구특성 상 60대도 소위 ‘막내’라고 하는 가운데 만 40세 미만 계층을 청년농업인이라고 보기에 무리인 현실 농촌인구에 한해서 연령기준에 대한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영농경력 3년 이하는 정착하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영농경력 5년 이하 등으로 경력기간 확대 필요성 제기 * 프랑스의 경우, 영농경력 5년 이하 지원 3년이 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내인지 확인함으로써 가구당 1명만이 청년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라.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농지 소재지와 주거 소재지가 행정구역 상 인접 시군으로 분리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신청가능 불가조건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단기근로자는 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합산한 부과액 기준)		농업소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농외소득 창출활동은 불가피함을 이해할 필요 그렇지 않다면, 농외소득 창출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소득안전망 장치의 적극 확대, 영농정착지원금의 대폭 확대 필요성 제기
사후관리 체계	1기 : 2018년~2020년, 이후 지원끊김 2기 : 2019년~2021년, 이후 지원끊김 3기 : 2020년~2022년, 이후 지원끊김 시행지침 상 사후관리 체계는 없음		기수별 대상자가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끊기면서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 대상으로 사후관리 체계 및 지속지원 필요성 제기, 충남의 연도별 영농정착지원대상자 현황 및 현재까지 남아있는 청년농부 현황 파악 필요

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 검색일자 : 2022.08.15.).

2. 농민신문(2022.04.29.), “새정부 청년농 육성하려면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선율”(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54863/view>, 검색일자 : 2022.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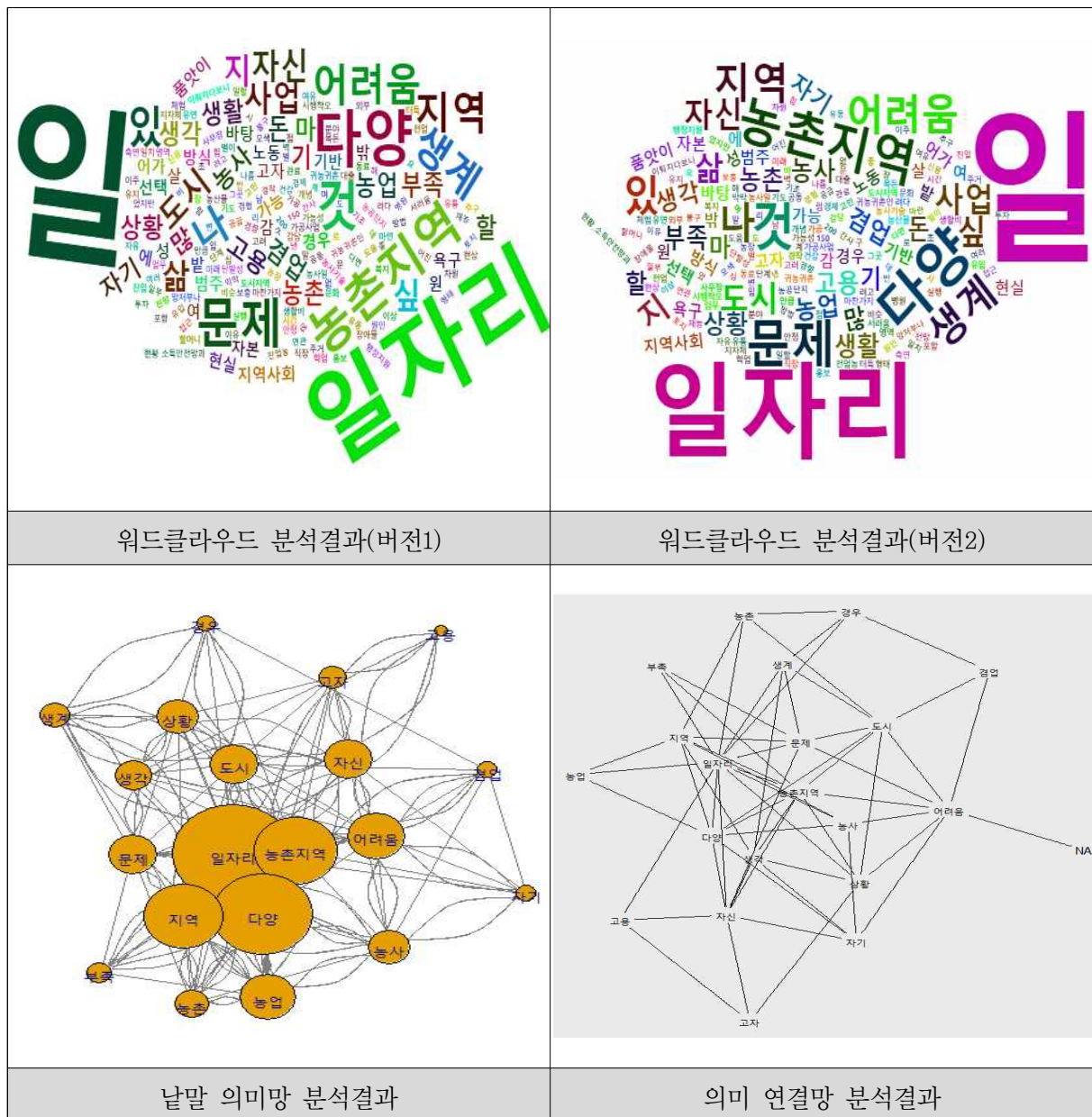
3. 농업인신문(2021.07.16.),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필요”(출처 :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75>, 검색일자 : 2021.07.16.).

주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함.

② 키워드 및 내용 분석 결과(〈그림 5-5〉 참고)

-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와 낱말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촌지역 내 일자리 부족, 다양한 일자리 부족,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사 외에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문제, 전업이 불가하여 겸업이 불가피한 구조, 농사만으로 생활비 감당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5〉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석, 작성함.

③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11〉 참고)

- 주요 내용은 낮은 임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부족, 다양한 일자리 부족, 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선택가능한 일의 범주가 좁은 현실), 초기자본이 없는 한계로 겸업활동이 불가피한 소득 구조, 도시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와 다른 접근, 청년의 수요와 지역 내 일자리 공급 불일치, 일자리는 곧 생계 및 생활기반이라는 개념, 일자리 부족 및 안정적 수입은 상호 연계된 문제, 자립단계에서의 여유는 안정적 일자리, 농촌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확장 가능성, 공동농장, 농사기술 사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11〉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농사일을 품앗이로 하는 청년이 할머니보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겪기도 한다. 생계를 위해 도시에서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 일자리를 통해서 유입되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때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막막한 경우도 있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
일부 직장생활을 하지만 오래 버티기 어렵다. 농공단지에도 200만 원 넘는 일은 없고 1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 정도별리로 살 수는 있지만 주거, 병원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감당할 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
농촌에 필요한 복지, 문화 등의 투자가 행정지원으로 이뤄지다보니 좋은 일자리를 관료들이 독점하는 현실이다.	좋은 일자리 부족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일의 영역은 농업, 사무장, 마을간사 등 중앙저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적 접근으로 만들어 낸 한시적 고용형태의 일자리가 많다. 좋아서 하는 일, 즐겁게 살아가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또다른 장애물이 된다.	다양한 일자리 부족
농촌지역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에서 청년들이 일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선택가능한 일의 범주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다양한 일자리 부족
마을사업을 만들어진 일자리에서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지만 청년은 마을에 고용되기 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선택가능한 일의 범주가 좁은 현실)
농촌지역의 일의 범주는 도시에서보다 다양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어나가는 데에도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발성일들을 하며 겸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초기자본이 없는 한계로 겸업 활동이 불가피한 소득 구조
청년들이 농사지으려고 해도 토지를 살 돈이 없고 신용도 없어서 대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업농이 되기 어렵다. 자기 생활비를 벌 일감이 없으므로 겸업할 수 밖에 없다.	초기자본이 없는 한계로 겸업 활동이 불가피한 소득 구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하나의 일을 찾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농사를 전업으로 지을 때에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과 어려움이 따른다. 겸업을 할 때에도 그 나름의 어려움은 수반된다.	초기자본이 없는 한계로 겸업 활동이 불가피한 소득 구조
도시지역에서 일자리 부족 현상은 학업을 마치고 여러요건을 고려하여 일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도시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와 다른 접근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역에 내려간 청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생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일으 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해줬으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청년의 수요와 지역 내 일자리 공급 불일치
일자리 개념은 단순히 노동, 업무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생활의 기반이자 기초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일자리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삶을 꾸려가는데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이며 동시에 먹고사는 문제와 일치한다.	일자리는 곧 생계 및 생활기반이라는 개념

주요 내용	요약
일자리 부족이 큰 문제다.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일자리 부족과 안정적 수입은 상호 연계된 문제
(자립단계는) 외부도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모색할 전망과 여유가 생기는 단계이다.	자립단계에서의 여유는 안정적 일자리
일(노동)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과 관계맺는 청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농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관사업의 가능성이 많다. 체험사업, 가공사업, 유통 등으로 말이다. 청년들의 욕구가 다양한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면,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공이나 홍보, 유통까지를 포함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일감이 우선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농촌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확장 가능성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힘들다는 점도 농촌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한계 중 하나이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함께 할 동료를 만나기까지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히려 도시에서의 삶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확장 가능성
청년들은 공동농장이나 남의 밭 품앗이에서 익힌 농사기술을 바탕으로 자기 밭을 마련해 경작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모자라는 생계비를 보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한다.	공동농장에서 농사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례

자료 : 독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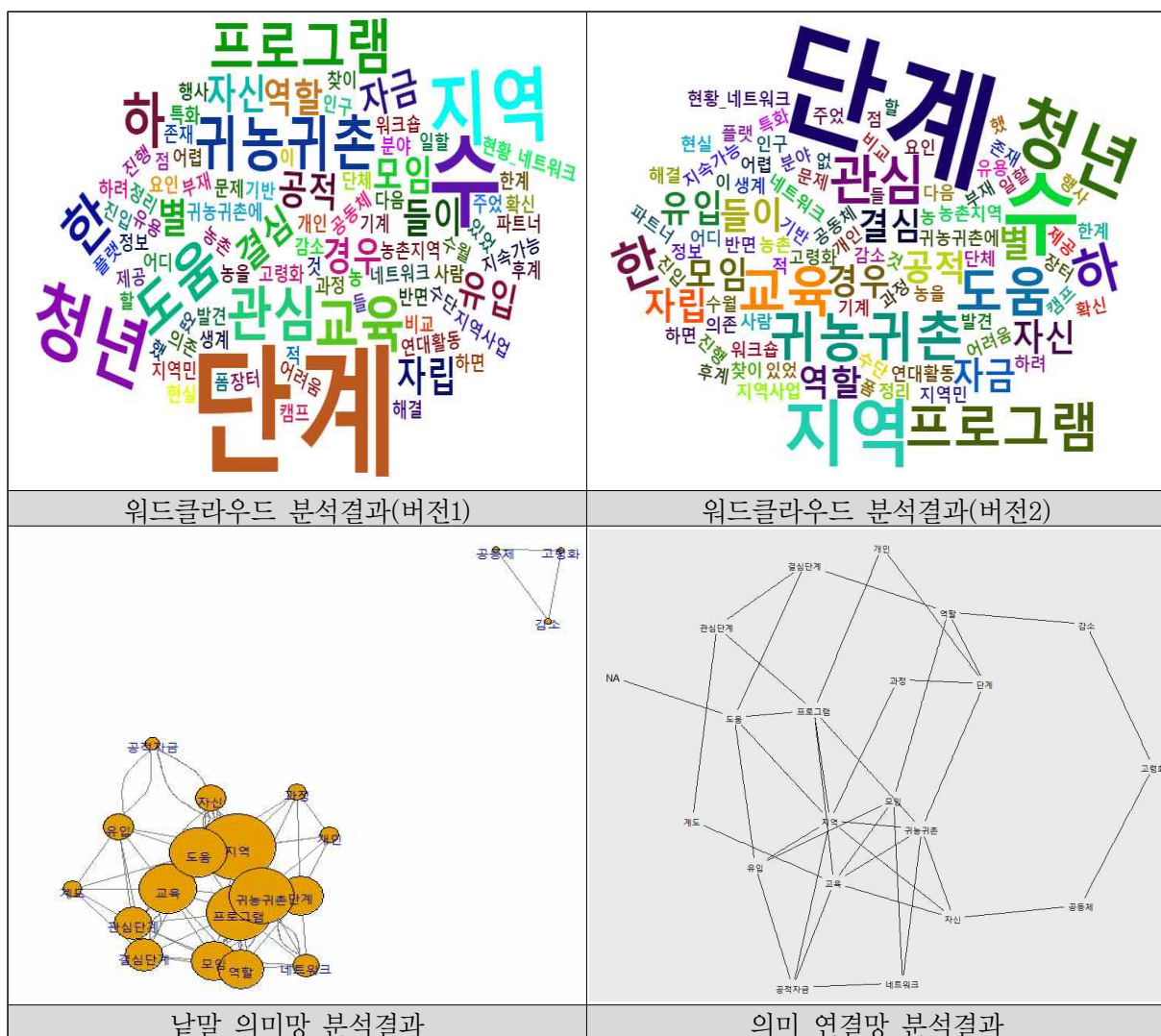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네트워크 및 플랫폼⁹⁾ 구축 분야

① 키워드 및 내용 분석 결과(〈그림 5-6〉 참고)

-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와 낱말 간 연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심과 결심 단계별 프로그램 차등,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와의 연결, 다양한 워크숍 및 모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대활동과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6〉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석, 작성함.

9) 주 : 플랫폼이란, 어떤 것의 기반이라는 사전적 의미(나무위키)로서 공동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생태계, 유무형의 집합체, 공간과 프로그램 의미로 사용한다. 녹색사회연구소 등(2015)에서는 “청년들의 지역진입을 돕는 관문(portal)이자 지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정보, 생활, 일, 관계, 정서)을 완충하기 위한 유무형의 공간과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저자 주).

②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12〉 참고)

- 주요 내용은 공적자금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수단,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서 교육한계를 극복, 정보 제공 네트워크 모임·행사(캠프, 워크숍)·교육 기회 필요, 농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 찾기, 귀농귀촌 파트너와의 만남기회 도움, 단체나 프로그램의 도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으로서 지역 내 유헴 시설 활용한 지역 공동자산화하여 정보공유와 소통 과정 조성, H/W 관점에서 물리적 공간으로서 소통 플랫폼 구축 구상, S/W 관점에서 청년농업인 간 지역,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표 5-12〉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공적자금으로 이뤄지는 지역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물론 청년들이 공적자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립수단이 될 수는 없다.	공적자금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수단
교육의 한계도 존재한다. 관심단계나 결심단계까지는 도움을 주지만 유입으로 이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서 교육한계를 극복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임, 행사, 교육 프로그램은 관심단계와 결심단계에서 유용한 역할을 했다. 단계별 진행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에서 여는 귀농귀촌 캠프나 워크숍, 장터나 네트워크 모임도 같은 역할을 한다.	정보 제공하는 네트워크 모임·행사(캠프, 워크숍)·교육 기회 필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농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할 사람의 부재하다. 후계농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계농으로 인한 지역민과의 연대활동도 어렵다.	농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귀농귀촌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귀농귀촌 파트너와의 만남기회 도움
청년의 지역 진입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청년 개인이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에 어려움이 많은 반면, 단체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경우 비교적 다음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단체나 프로그램의 도움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①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13〉 참고)

- 주요 내용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 지역사회와 교류, 경험적 계기의 중요성, 지역탐색과 마음먹기 단계의 중요성, 결심하는 단계에서의 온오프라인 정보습득네트워크·지역살이 중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을활동 참여, 마을자치회 등 마을단위 조직 및 사람 등과 함께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으로서 문화교육복지 측면의 지원 강조 중요, 특히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 확보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5-13〉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	요약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습득이다. 인터넷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어려웠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라는 답만이 돌아온다. 지역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열의가 떨어지는 지역도 존재한다.	정보 습득의 어려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살만한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지역민들이 낯선 사람을 배척하고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는다.	정보 습득의 어려움
특정지역이나 단체와 교류하면서 지역 진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경험적 계기 청년은 단체나 지인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고 구체적으로 얻지만 이론적 계기의 경우 인터넷과 매스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 주류 귀농귀촌 과정이 소개하듯 지역 귀농귀촌센터나 이장을 통해 지역을 방문해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 것은 양질의 정보획득에 한계가 있다.	정보 습득의 어려움
경험적 계기는 귀농귀촌한 청년의 경우 농사짓는 지인의 영향을 받거나 농활, 지역 거점과 교류하면서 농촌에 관심이 생겨난다.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지역사회와 교류, 경험적 계기의 중요성
귀농귀촌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특정지역에 진입하는 단계다. 청년 중 다수가 어느 지역에 진입할 지 탐색하는 기간을 갖는데 여러 곳의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탐색하기도 하고 한 지역에 정착할 마음으로 갔다가 뜻하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지역탐색과 마음먹기 단계의 중요성
정보를 수집하면서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되는 단계이다. 지역살이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자신이 지역과 맞을지 탐색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며 귀농귀촌자, 희망자 들과 네트워킹하거나 단기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이나 욕망과 지역살이가 맞는지 확인해보기도 한다.	결심하는 단계에서의 온오프라인 정보습득네트워크·지역살이 중요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 그 외 정책방향, 주체별 역할에 대한 생각

① 선행연구 및 선행자료 검토 결과(현황 중심)(〈표 5-14〉 참고)

- 정책방향과 접근관점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금 농업인에게 처한 현실이나 청년농업인에게 처한 현실과 문제점은 동일하므로 향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방향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는 청년들과의 관계 맺기 역할,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사업운영 역할, 청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5-14〉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

구분	주요 내용
정책방향과 접근관점	00파동,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 등 농업정책의 부실 등으로 인한 농가부채 및 생존 위기에 놓인 것은 지금 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같은 현실이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농업정책 등을 추진해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농정착금 지원 정책을 펴며 젊은 세대를 유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농축유통신문, 2020). 그동안 농식품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 및 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해 건설한 영농창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농축유통신문, 2020).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정서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지역주민들과 관계맺음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이 지역에서 할 역할을 찾기도 한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지자체 역할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나 지역 문화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사업은 부서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경직성이 존재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유연한 사업운영이 어렵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 산재하며 부서별 칸막이가 존재한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청년주체 마인드와 역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를 통해 먹고사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득을 위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가능한 만큼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 농사 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농사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농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텃밭과 소규모 경작의 경험은 이후 전업농으로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험과 자산이 되기도 한다(녹색사회연구소, 2015).

자료 : 1.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2. 농축유통신문(2020.10.16.), “[뉴스픽업]청년농 없는 농업·농촌 미래는 없다.”(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8>, 검색일자 : 2022.08.15.).
주 : 선행연구 등으로부터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에 해당하는 문장을 발췌하여 저자가 분류, 작성함.

06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 핵심사항 요약

-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현황 및 문제점은 ‘농지기반, 정주기반’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 청년농업인 초기 정착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농지확보, 영농자금확보, 정주여건, 주택, 복지, 문화, 의료,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농업인 유형에 따른 차등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청년세대의 경향과 특징

- 주요 내용은 이전세대와 다른 현재 2030세대의 귀농귀촌으로서 다양한 관심거리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농촌지역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삶, 자신의 성장과 욕구 실현, 자연과 문화가 있는 삶, 대안적인 삶·생태적인 삶·탈자본화된 소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삶,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농적 생활 욕구 등을 이유로 농촌지역 이주를 결정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은 ‘2022년을 살아가는 2030 청년세대만의 경향과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존 정책과 사업에 명칭만 청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농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재 농정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 농지 분야

-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 어려움, 농지정보 부족, 열악한 정보 접근성, 농어촌공사 및 농지은행 사업방식 아쉬움, 농지구입 및 시설투자 여력 부족, 농지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 분야 방향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농지의 유연한 공급 체계, 농지정보와 농지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현재 농지실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련 사업 혁신' 등이 필요하다.

●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에 많은 빈집, 귀농인들에게 적합한 숙소 부족, 생활할 공간 부족, 유입을 위해서 적절할 주거지 확보 필요,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취약 등 청년농업인의 주택수요와 농촌지역에서의 주택공급 간 불일치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주거 등 정주기반 분야 방향은 '청년농업인 원하는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사업, 적절한 입지조건과 주택설계 구조, 주택 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 현재 주거실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

● 교육 분야

-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농사기술 습득 및 멘토-멘티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사기술을 전수해서 농업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농촌에 스며들도록 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 도시지역과는 다른, 생태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농촌의 대안적 문화에 대한 욕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교육을 통해서 농적 가치를 확장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 도농연대 혹은 도농교류로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 분야 방향은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농촌에 스며들도록, 농적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진정한 멘토를 찾고 이를 연결해주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 주요 내용은 농기계 구입 및 비닐하우스 시설과 같은 농사기반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투자와 비용 필수,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불가피, 농사기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확보 필요,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 문턱이 높은 농협 대출조건, 빚을 만들어가는 정부의 정책금융에 대한 비판, 대출로 인하여 빚쟁이 양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사기반 지원(각종 보조사업) 분야 방향은 '자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농사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종 농협의 대출조건 완화, 청년농업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단계에서 확실한 지원체계' 등이 필요하다.

●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 주요 내용은 청년교육생 불안감 고조, 스마트팜 청년창업 선발인원의 중도포기, 수혜

대상의 소수에 집중, 스마트농업을 통한 데이터 체계 부족, 스마트팜 재배품목의 단순화, 일부 품목에 집중된 스마트팜으로 인해 기존 농업과의 차별성 부족, 경쟁구도 심화, 청년층 선발비율 및 취업률 감소로 사업성과 미흡, 지역주민과의 갈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영실습농장 기대 미흡,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기반 없는 청년육성 성과창출 미흡하고 법과 제도 간 충돌 상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저조한 예산 집행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사기반 지원(스마트팜) 분야 방향은 ‘스마트팜 독립경영을 위한 사전 경영실습단계와 현실 격차를 최소화하는 실천전략, 기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하는 다각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

●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 내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부족, 다양한 일자리 부족, 하고 싶은 일자리 부족(선택가능한 일의 범주가 좁은 현실), 초기자본이 없는 한계로 겸업활동이 불가피한 소득 구조, 도시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와 다른 접근, 청년의 수요와 지역 내 일자리 공급 불일치,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농사 외에 다른 업종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문제, 전업이 불가하여 겸업이 불가피한 구조, 농사만으로 생활비 감당 부족, 일자리는 곧 생계 및 생활기반이라는 개념, 일자리 부족 및 안정적 수입은 상호 연계된 문제, 자립단계에서의 여유는 안정적 일자리, 농촌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확장 가능성, 공동농장, 농사기술 사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소득안전망 및 일자리 분야 방향은 ‘농촌지역 내에서 질적으로 좋고, 다양하고, 하고 싶은 일자리를 발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직 활성화, 청년들의 다양한 시선과 수요를 담아내는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 주요 내용은 관심과 결심 단계별 프로그램 차등, 귀농과 귀촌에 대한 관심,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와의 연결, 다양한 워크숍 및 모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대활동과 프로그램 활성화, 공적자금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자립수단,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로서 교육한계를 극복, 정보 제공 네트워크 모임·행사(캠프, 워크숍)·교육 기회 필요, 농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 찾기, 귀농귀촌 파트너와의 만남 기회 도움, 단체나 프로그램의 도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방향은 ‘농촌 공동체 내에서 청년농업인들도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공간, 그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지역에서 사람을 발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 주요 내용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 지역사회와 교류, 경험적 계기의 중요성, 지역탐색과 마음먹기 단계의 중요성, 결심하는 단계에서의 온오프라인 정보습득·네트워크·지역살이 중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문화 및 농촌마을 생활 분야 방향은 ‘농촌지역 내에서 마을주민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 경험과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마을 내에서 다양한 실천활동 권장’ 등이 필요하다.

● 그 외 정책방향, 주체별 역할에 대한 생각

- 정책방향과 접근관점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금 농업인에게 처한 현실이나 청년농업인에게 처한 현실과 문제점은 동일하므로 향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방향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는 청년들과의 관계 맺기 역할,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유연한 사업운영 역할, 청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기에서 중요함을 강조

☞ 시사점 : 민선 8기 충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주체별 역할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 맺기가 핵심,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체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2. 기본전략 및 주요 방향

● 기본전략 및 방향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 (유입 측면) 첫째, 청년들을 농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에 농사일을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하고 양질의 지역 내 일자리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농업과 농촌의 매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육성 측면) 둘째, 지금까지 펼쳐온 농정의 한계를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즉, 생산주의 농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은 새롭게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공통 측면) 셋째, 새로운 구성원인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사회, 마을구성원, 농촌 공동체 간 사람과 사람 간 관계 맺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청년 세대는 '새로운 일을 원하는 세대'이다. 이 새로운 일이야말로 청년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세대의 일로서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공동체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다양한 상상과 실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일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 되어 주면 좋겠다.”

자료 : 강민정(2022.08.12.), “아침을 열며 : 공무원을 박차고 나와 청년들이 향하는 곳은?”, 한국일보 칼럼.
출처 : 한국일보(<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112470005866>, 검색일자 : 2022.08.12.).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지금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생산주의적 농업 하에서는 이제 막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아 여기에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전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하고 지원금을 준들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농업이 좀 더 다원적이고 사회적인 농업을 지향하게 된다면 그때 청년들이 조금씩 농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료 : 김현희(2018.06.01.), “[농촌 2030, 그들이 사는 법] 청년에게 농업을 허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4>, 검색일자 : 2022.08.01.).

“청년을 농촌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새겨봐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 농업만으로는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 외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모으는 구상이 절실하다. 다양한 창직(創職)이 가능하도록 돕는 큰 그림의 접근을 말한다. 농업이 청년 유입의 유일한 목적으로 귀결되서는 곤란하다. 청년이 모이면 분업도, 협업도 가능하다. 서비스 산업은 물론 편의 시설도 생긴다. 혼자서는 어려운 다양한 사업구상도 할 수 있다. 소위 집적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마을, 지역 주민,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지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구상돼야 한다. 청년의 삶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청년들에게 재미(fun)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미는 문화를 낳고 문화는 일자리를 낳는다. 함께 있어야만 재미가 생긴다. 서비스 산업도 문화도 모여야 생긴다. 청년농업인 각자가 도생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을 지역별로 한군데 모으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 구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청년농업인에게 는 청년이 필요하다.”

자료 : 유동훈(2022.08.08.),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투데이포럼.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114>, 검색일자 : 2022.08.08.).

● 주요 방향

-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 진출될 수 있으며 완전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핵심이어야 한다.
- 이러한 선순환 체계 구축이 되려면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교**해 정책 만족도와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민정, 2019)¹⁰⁾.
- 농촌지역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형 청년농민에 대한 유입, 육성, 정착 지원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소득, 정주, 농지, 문화, 의료, 복지, 공동체 등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 청년농민이 원하는 농지 및 규모화 지원, 청년농민 단계별 영농 적응훈련 및 자금지원 확대, 충남형 농촌재생 및 농촌공간계획 수립, 청년세대 맞춤형, 소규모에도 적용가능한 시설원에 스마트팜 기술 보급과 조성, 농사기술을 습득하고 농번기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청년농민 인턴제, 농촌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농민들의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지역살이를 통한 농촌문화 및 농촌생활 선경험 등이다.

- 청년농민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통합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핵심사항 실행을 위한 통합부서 설치, 이를 통해서 비로소 정책 구현이 가능하다. 즉,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통합부서의 총괄기획이 필요하고 통합지원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 영농승계 농민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입한 청년창업농민도 역차별 받지 않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산기준이 아닌 영농의지 및 마을공동체 활동 기준 등도 사업대상자 자격기준에 포함한다.

10) 자료 : 김민정(2019), AHP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 문헌〉

- 강마야.최돈정.손성규(2022),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 시리즈1 :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충남 정책지도 2022-08 통권 35호, 충남연구원.
- 강민정(2022.08.12.), “아침을 열며 : 공무원을 박차고 나와 청년들이 향하는 곳은?”, 한국일보 칼럼(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112470005866>, 검색일자 : 2022.08.12.).
- 김기홍(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방안 연구, 전략연구 2020-16, 충남연구원.
- 김기홍(2019),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전략연구 2019-02, 충남연구원.
- 김민정(2019), AHP를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김현희(2018.06.01.), “[농촌 2030, 그들이 사는 법] 청년에게 농업을 허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4>, 검색일자 : 2022.08.01.).
- 김현희(2018.06.29.), “[농촌 2030, 그들이 사는 법] 청년을 위한 빈집은 없다.”, 한국농어민신문 오피니언(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92>, 검색일자 : 2022.08.01.).
- 김혜진(2022.04.11.), “시골에서 집 구하려면 마을 이장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이로운넷 오피니언 테마 칼럼(출처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989>, 검색일자 : 2022.04.11.).
- 녹색사회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문화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삼선재단(2015),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의 현실과 과제,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재단법인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연구용역 보고서.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20), 2030세대 청년농업인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 배균기.조원지.이병훈(2021),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1-21, 전북연구원.
- 변재연(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사업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유동훈(2022.08.08.), “청년농업인에게 청년을 허(許)하라”,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투데이포럼(출처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114>, 검색일자 : 2022.08.08.).
- 이향미.이미선(2022), 지역별로 차별화된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임소영.마상진(2021), 청년,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정임.최윤지.최정신.정용경(2019), 청년농업인의 거주지역 선택 결정요인.

〈기사 및 자료〉

- 농민신문(2022.08.24.), “정부 뭉치돈 들어간 사업 추진 ‘잔걸음’ 없고 ‘소걸음’만”(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61624/view>, 검색일자 : 2022.08.24.).
- 농민신문(2022.06.22.), “‘이름만’ 스마트팜 ‘말로만’ 청년농 유입…고도화·확산 필요”(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57699/view>, 검색일자 : 2022.06.22.).
- 농민신문(2022.04.29.), “새정부 청년농 육성하려면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선”(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54863/view>, 검색일자 : 2022.07.15.).
- 농업인신문(2021.07.16.),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필요”(출처 :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75>, 검색일자 : 2021.07.16.).
- 농축유통신문(2022.08.11.), “청년농 농지확보-온실 설치 자금 지원 확대”(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63>, 검색일자 : 2022.08.15.).
- 농축유통신문(2022.04.05.),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기회 더 확대된다.”(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13>, 검색일자 : 2022.08.15.).
- 농축유통신문(2022.03.24.), “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14>, 검색일자 : 2022.08.10.).
- 농축유통신문(2020.10.16.), “[뉴스픽업] 청년농 없는 농업.농촌 미래는 없다.”(출처 : <https://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8>, 검색일자 : 2022.08.15.).
- 아주경제(2022.08.16.), “29-35-45?…법 따라 다른 ‘고무줄’ 청년 나이”(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6145335248>, 검색일자 : 2022.08.16.).
- 한국농어민신문(2022.03.02.), “농정공약 집중해부 ③청년농업인이 본 농정공약 [2022 대선 연속 기획] “농촌 청년의 삶 관심 있나…새로울 것 없는 재탕공약 실망”(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7606>, 검색일자 : 2022.08.15.).
- 한국농어민신문(2019.09.27.), “첫 단추 잘못 끼운 ‘스마트팜 혁신밸리’…애꿎은 청년들만 속 탄다”(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013>, 검색일자 : 2022.08.10.).
- 한국농어민신문(2019.09.03.), “스마트팜 ‘실적내기’ 조급증에 정책-제도 곳곳서 ‘엇박자’”(출처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448>, 검색일자 : 2022.08.10.).

〈정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료,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회.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2.03.24.), 청년농업인 체감형 지원 사업으로 성장·발전 뒷받침 : 농업 인재 양성·청년층 농업 진출 확대 위한 마중물.
- 대한민국(2022), 정책뉴스 : 청년에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17)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 내 집 마련 기회 넓히는 ‘주거사다리’ 복원…기여금 매칭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2022.06.16.).(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556>, 검색일자 : 2022.08.12.)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12.23.),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로 농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 관계부처 합동(2021.12.23.),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안),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2.15.), 스마트농업 인력 기술의 확산 거점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11.29.), 스마트농업 인력, 기술의 확산 거점인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첫 운영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충청남도(202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화마당(2022.07.15.).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 충청남도(2022), 제1차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2년 시행계획(안).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22), 2022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 6. 청년농업인분야, pp.581~661.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9),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내부자료(2019.1~12.).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2022), 국가중점개발데이터 : 토지소유정보서비스(2022년 7월 6일 기준).
-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 통계청(각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 시도별·성별·연령별 귀농가구주.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조사 : 경영주 연령별 농가.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조사 :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및 농가인구.

〈누리집〉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검색일자 : 2022.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 2022.08.01.).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자 : 2022.08.01.)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검색일자 : 2022.08.01.)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 검색일자 : 2022.08.15.).
-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young/1384/subview.do>, 검색일자 : 2022.08.01.)
- 농림축산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http://uni.agrix.go.kr>, 검색일자 : 2022.08.01.)
-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검색일자 : 2022.07.01.).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검색일자 : 2022.08.01.)

〈조례 및 법률, 가나다순, 검색일자 : 2022.08.01.〉

-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청년기본법
-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
-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